



삼일회계법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도입과 확산 : 공시 변화와 향후 과제

삼일PwC 밸류업지원센터
김용범 Partner

2026.6.16

Agenda

- 1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 일본 사례
- 2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
- 3 제도의 확산과 공시 참여의 확대
- 4 공시 내용의 변화와 향후 과제

1. 일본 vs 한국 도입 배경

일본은 자본시장 저평가 문제를 배경으로 자본비용 인식 중심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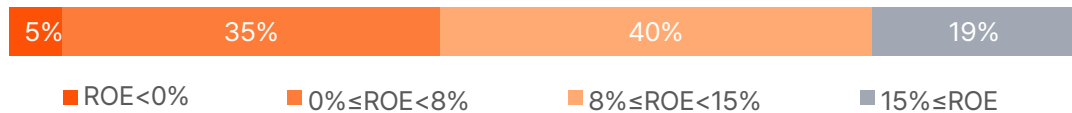
일본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현"

자본시장 구조적 저평가 지속(2023년 4월 기준)

- 일본 주요 상장기업의 43%가 PBR 1.0배 미만으로 거래



- 주요 기업의 약 40%의 기업이 ROE 8% 미만 수준의 수익성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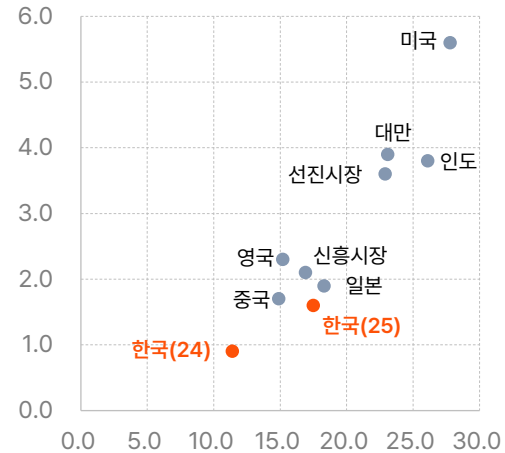
자본가치 인식에 대한 경영과 시장 간 괴리

- 경영의 초점이 자본 기반 가치 창출 지표가 아닌 손익계산서 중심 지표에 여전히 집중
- 아베노믹스 이후 지배구조 개혁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효율성 개선으로의 연결은 제한적인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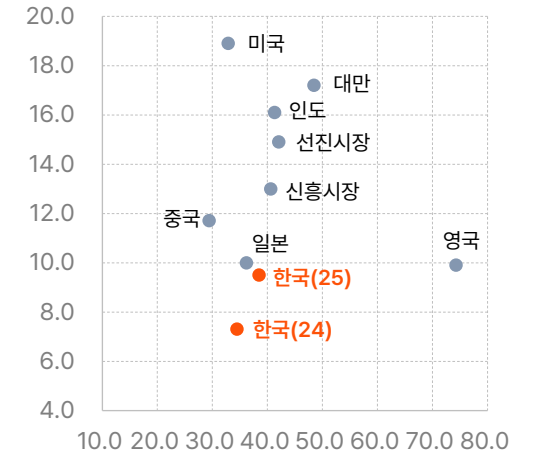
출처: TSE's Recent Initiatives on Corporate Governance (2023)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로 : PER | 세로 : PBR



가로 : 배당성향 | 세로 : ROE



- 코리아 디스카운트(낮은 자본효율·지배구조 한계)가 정책 도입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정책 도입 이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밸류에이션 및 수익성 격차는 지속되어 추가적 제도적 보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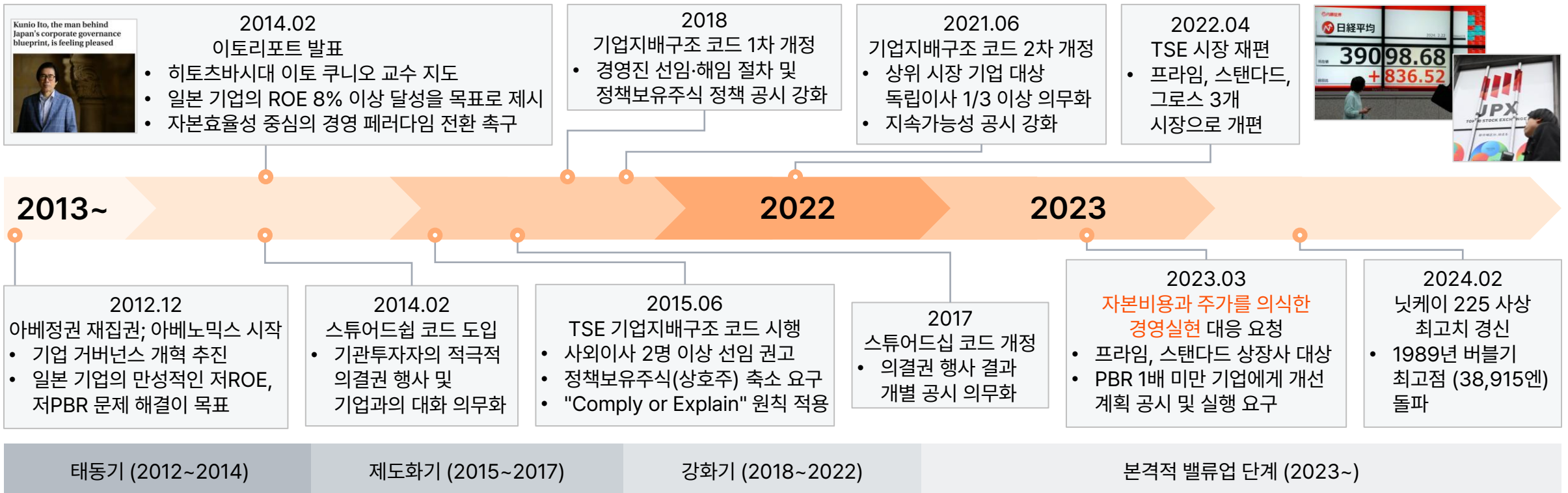
자료: 한국 배당성향 - KRX Market Place, PER, PBR, ROE 및 해외 배당성향 : Bloomberg / 기준 : MSCI Index 주1) 2025년말 기준 지표이며, 한국은 비교 표시를 위해 2024년말 기준 지표도 포함하여 비교

2. 일본의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현" 진행 과정

일본은 지배구조 개혁을 시작으로 10여년에 걸쳐 자본시장 구조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현

일본거래소그룹(이하 "JPX")는 2023년 3월 "자본비용과 주가를 의식한 경영의 실현"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시요청은 2023년 3월에 이루어졌으나, 일본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은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흐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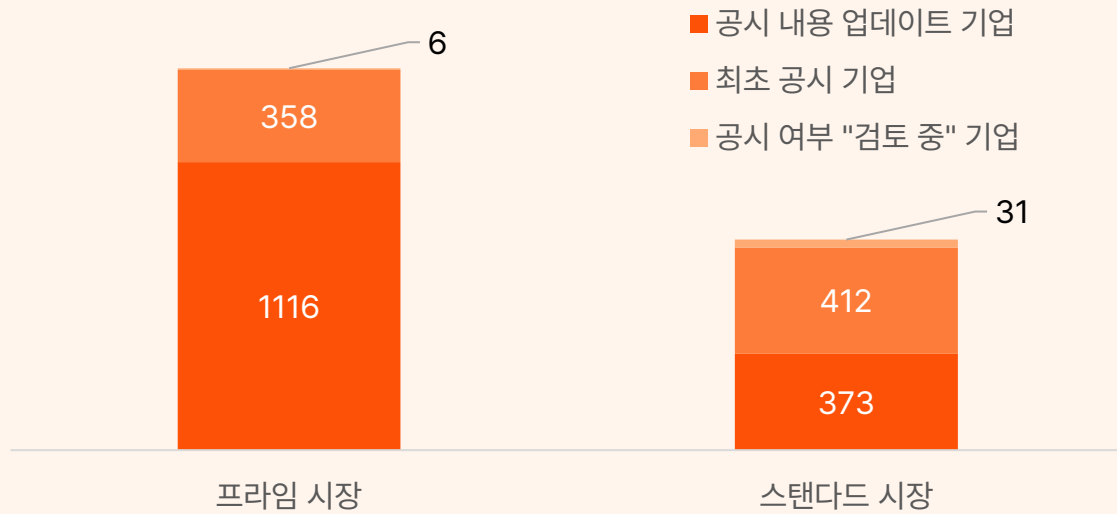


3. 일본의 성과

이러한 제도적 추진을 통해 일본 기업들은 공시 참여 확대와 함께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영 방식이 점차 확산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밸류업 공시 및 업데이트 현황



- 프라임 시장 상장사 93%(1,480개사), 스탠다드 시장 상장사 52%(816개사)가 공시에 참여
- 공시 기업 중 프라임 시장 1,116개사와 스탠다드 시장 373개사는 최초 공시 이후 내용을 업데이트

출처: 자본비용 및 주가를 고려한 경영 실현을 위한 대응 공시 현황(2026), Yahoo Finance

일본 증시 현황

통화 기준: JPY
단위: Points

Nikkei 225



- 자본 효율성의 구조적 개선과 함께 긍정적인 시장 모멘텀 형성
- 2023년 3월 프로그램 도입 이후, 니케이 지수는 상승 추세 지속

출처: Yahoo Finance

4. 일본 밸류업 공시 사례 ①

일본의 우수 공시 사례는 자본비용 인식을 기반으로 현황 분석-목표 설정-이행 전략을 구조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Kao Corporation / 소비자

자본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ROIC, 성장 잠재력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당사 포트폴리오가 어떤 상태를 갖춰야 할지 신도 있게 논의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을 검토하고자 내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의사 결정 기준으로서 삼고 있고, 사업별 현황 모니터링도 시작했습니다.

각 영역의 주력 사업과 브랜드, 현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광범위하게 마케팅과 R&D에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K27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 ROIC와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검토 후 FY2023에 아기 기저귀 생산 구조를 재편하고 Healthya의 차 카테고리 음료 사업을 압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스킨케어 관리를 통한 수익 능력 향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업무 방식을 검토하여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창의성을 자극하려는 TCR 조치는 임직원들 사이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 현금 흐름 창출 및 투자 우선순위 파악

FY2023 영업 현금 흐름(CF)은 재고 감소 등 조치로 전년 대비 700억 엔 이상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를 소유한 Bondi Sands를 인수하여 잉여 현금 흐름이 약 372억 엔 증가했습니다. 당사는 사업 수익성을 개선하여 영업 현금 흐름을 계속 늘리는 동시에 현금 전환 주기(CCC)를 단축하여 현금 흐름 증대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금 흐름을 사용하기 위해 K27 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다음 분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 1) 핵심 브랜드의 경쟁 우위를 강화하는 분야
- 2) 광범위하게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
- 3) 성장 중인 분야에서 ROIC를 증가시키는 분야

사업 투자 후 해당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사 상태에 따라 자사 주 매입을 위한 전략적 자본 할당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재무 건정성을 유지하고 합병 및 인수(M&A) 등 일시적인 현금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CCC: 현금 전환 주기

● 중기적 자본 정책 - EVA 관점을 감안하여 실행

5년간 목표 (FY2023-2027)

영업 현금 흐름	1.1조 엔
부채 +	
자본 지출	ROIC 향상 강화
전력적 투자	M&A 신규 사업
M&A + α	대용 활용

● 사업별 ROIC 개선 수준 예상(FY2023 실적 > FY2024 추정)

상황 요인 영향적인 수입 사업 전환

라이프 케어
Healthya 차 카테고리 음료 사업 압도

아기 기저귀
중국 내 생산 중단
물론 내 생산 시스템 최적화

스킨케어
Bondi Sands 인수

위생
Asian Toilet Clean Toilet 사업 압도

라이프 케어
레이저케어

의약품
의약품 제조 포함

코스메틱
핵심 브랜드에 집중 강화

사업 구조 조정 가속화를 위해 부실 사업을 정기적으로 검토

출처: Kao Corporation, Kao 통합 보고서 2024

ASAHI KASEI CORPORATION / 첨단 소재

PBR 수준 향상을 위한 이니셔티브

주요 구체적 이니셔티브

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변혁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성'과 '수익성/자본효율'이 낮은 사업의 구조전환 · 성장 견인사업인 GG10에 대한 전략에 따른 투자 실시
② 수익력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력 향상을 위한 대책의 추진과 철저한 비용 규율을 통한 단기이의 창출 · 경영제도와 경영기반의 근본적 수정을 통한 중장기의 효율경영 추구 · ROIC 경영 적용의 심화
③ 투자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안건의 기준 수익을 운용 강화 · 실질적 투자효율 개선으로 이어지는 모니터링 운용 · 리스크 검토에 과거 투자안건에서 얻은 교훈 활용
④ 자본시장과 대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투자자의 관심이 큰 분야, 올바르게 이해/평가 받기 위한 다양한 접근

PBR 수준 향상

ROE 향상 (FY2023: 2.5% ⇒ FY2030 근치: 15% 이상)

PER 향상 (주주자본비용 절감, 기대성장률 향상)

자본 할당 정책

자본 할당 정책과 관련하여 영업 캐시플로우는 현중계 3년 동안 6,000~7,000억 엔, 투자 캐시플로우는 계획 중인 성장투자 실시를 전제로 8,000억~9,0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FY2023에 제시한 수준과 같습니다. 한편 현중계를 발표한 FY2022 당초 계획과 비교하면 수익이 미달된 것을 고려하여 사업 매각과 투자 안건에서 타사 자본회용 등을 통한 캐시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금화 시기는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FY2024 중에 몇몇 사업 매각을 결정할 경우에는 FY2025 이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현금의 용도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성장투자 뿐만 아니라 자사주식 취득을 포함한 주주 환원 강화도 검토하겠습니다.

주주/투자자와 대화하다 보면 당사의 자본 할당 정책이 지나치게 투자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주십니다. 당사는 현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변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조전환과 성장투자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변혁의 진행상황을 고려하면서 주주환원수준을 추가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FY2022~2024 3년간의 자금 원천과 용도의 대강

영업 캐시플로우 3년 누계 6,000억~7,000억 엔	+ 기타 캐시 마련 (사업매각과 투자안건의 타사자본 활용 등)	투자 캐시플로우 설비투자/투융자 3년 누계(M&A 포함) 8,000억~9,000억 엔*
자금조달 유이자부채 증감 +2,500억~+4,500억 엔 (D/E ratio 0.7 정도, NET D/E ratio 0.5 정도 기준)		
+		주주환원 3년 누계 1,500억~1,800억 엔

*1 캐시아웃 기준의 수치로, 의사결정 기준과 다릅니다.

주요 경영지표의 추이

출처: ASAHI KASEI CORPORATION, Asahi Kasei Report 2024

5. 일본 밸류업 공시 사례 ②

공시 이후에도 목표와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Mitsubishi Corporation / 종합상사

(c) 주주 및 투자자와의 대화 정책 및 활동 :

MC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대화를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i. 주주 정기총회

MC는 주주총회를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자 간주하고 있다. MC는 주주총회 공지(일본) 시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질의 있다.

ii. 개인 투자자와의 소통

MC는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2024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의 활동>

개별 투자자 브리핑 세션: 2회(이 중 1회는 사장, CFO 등이 참여) 위의 내용 외에도 개별 투자자 대상의 짧은 안내 동영상 제작한 뒤 MC 웹사이트와 증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iii. 기관 투자자와의 대화

MC는 분기별 재무 실적 브리핑에 더하여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브리핑 세션 및 회의를 주최한다. 또한 "MCSV Creation Forum"이라는 명칭의 일회성 브리핑과 투자자 간담회도 개최한다.

<2024년 3월 31일 마감 회계연도의 활동>

재무 실적 브리핑*: 4회
MCSV Creation Forum*: 5회(사업 브리핑 세션 4회, ESG 브리핑 1회)
국내외 기관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인터뷰: 약 600회(이 중 약 30회는 사장 겸 CEO, CSEO 등이 참여)
국내외 기관 투자자 인터뷰: 약 40회(이 중 3회는 CSEO, 독립 이사 등이 참여)

(d) 내부자 정보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피드백

MC가 중기적 기업 전략 2024의 정량적 목표 중 하나인 두 자릿수 ROE 달성을 유지한다면 ROE는 자기자본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 MC는 최근 주가에 비추어 봤을 때 중장기 ROE가 10%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 중기적 기업 전략 2024의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MC는 사업 관리 시스템 기반의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운영하고, 공시 및 주주 및 투자자와의 대화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수익 성장과 공유 가치 창출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개선하고 있음. 나아가 MC는 이러한 IR/SR 활동을 통해 얻은 피드백을 경영 방식에 반영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함.

ANA Holdings / 항공

경영진 메시지
CFO 메시지
자본 수익률과 주가 개선 조치에 관하여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본비용과 주가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 FY2023 검토

ANA Group은 FY2023에 기록적인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배경이 있었습니까?

ANA와 Peach 브랜드는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인바운드 여행 수요를 효과적으로 포착하여 영업 수익, 특히 여객 사업에서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브랜드의 경우 영업 규모가 회복됨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이는 고정 비용을 통제하고 세금 및 공공보조금 등 특정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ANA Group 기업 전략에 적합한 대로 그룹의 재정 기반을 회복하는 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객 사업 실적이 뛰어난 덕분에 수익과 현금 흐름이 꾸준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재무 기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은 1,044억 엔을 달성했고, 자기자본 비율은 29.3%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약 4포인트 개선되었습니다. 당사는 적정 수준의 중기적 유동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수준을 따르면 자기자본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것임이 Investment Information, Inc.(R&I)는 신4회복을 인정하여 당사 신용 등급을 A-로 예 자급 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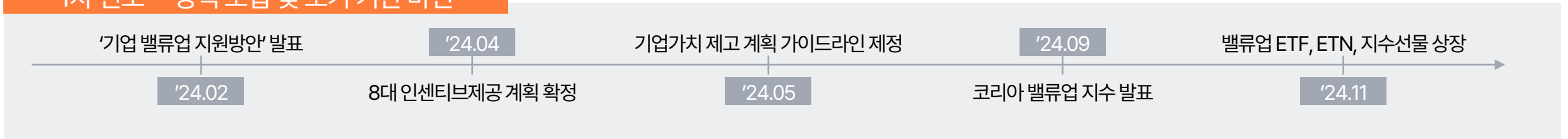
출처: Mitsubishi Corporation, 일본 기업 지배 구조 규범에 관한 이니셔티브

출처: ANA HOLDINGS INC., 연례 보고서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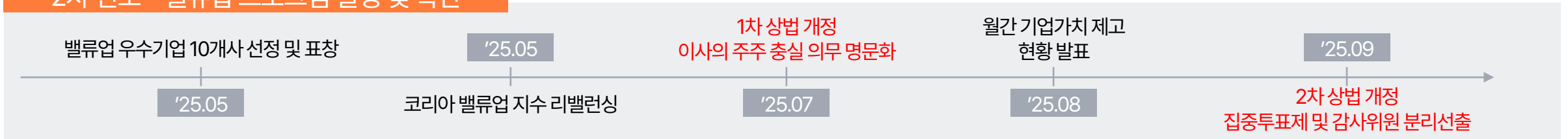
6.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과 진행경과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일본 사례를 참고하여 공시 기반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이후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이 제도를 지원하면서 시장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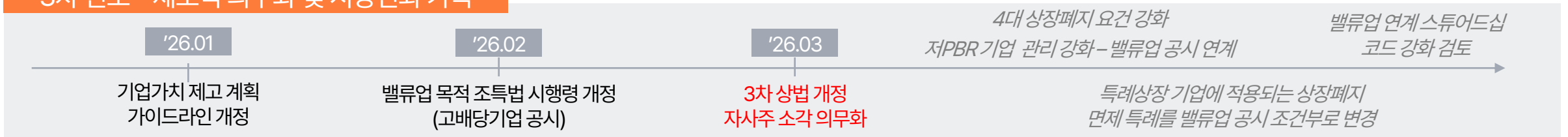
1차년도 – 정책 도입 및 초기 기반 마련



2차년도 – 밸류업 프로그램 실행 및 확산



3차년도 – 제도적 의무화 및 시장변화 가속



7.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성과

프로그램 도입 이후 기업 참여 확대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증가와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718_사

밸류업 공시 참여 상장사

- 본공시 714사, 예고공시 4사 제출, 본공시 기업 중 유가증권 시장은 339사, 코스닥시장은 375사로 구성
- 본공시 714사 중 104개사는 주기적 공시를 수행하여 이전 공시에 대한 이행평가를 포함하여 공시

77.4%

밸류업 공시 참여 비율

- 공시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77.4%, 코스피 공시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
- 고배당기업 617사 중 신규 공시 527사, 기존 공시 90사로 구성되어 신규 유입 중심의 공시 참여 확대

186%

밸류업 지수 상승률

- 지수 산출 개시일('24.9.30) 대비 200.4% 상승하여 동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154.5%를 45.9%p 상회
- 밸류업 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은 3.1조원을 기록하며, 최초 설정 대비 547.8% 증가

21.4_{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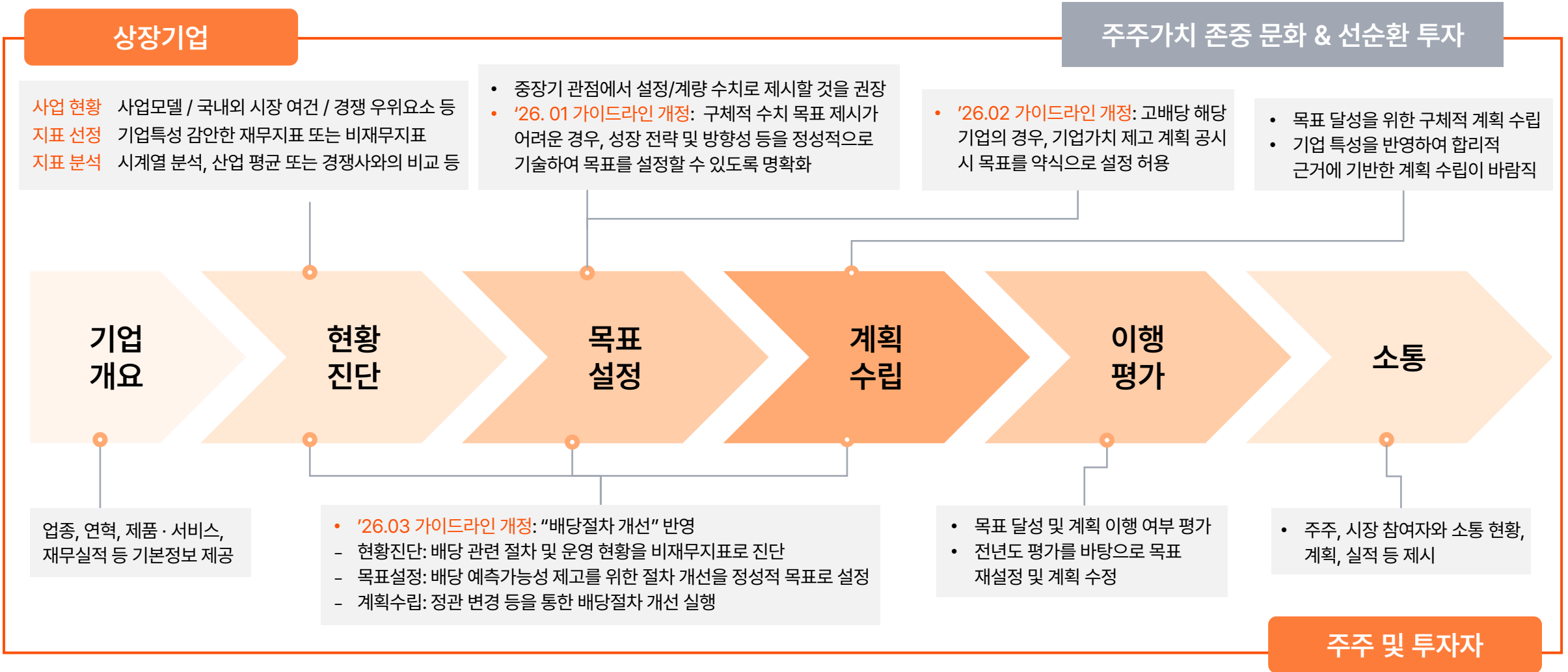
자사주 소각 규모

- '25년 자사주 매입 20.1조원, 소각 규모 21.4조원(전년 대비 +7.5조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26년 들어서도 케이티앤지(1.9조원 소각), KB금융(1.4조원 소각 및 6천억원 취득·소각 결정) 등 주요 상장기업들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계획 공시

출처: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6.4월)」, 2025년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결산

8.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가치창출 계획을 구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과 작성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 프로그램의 핵심 특징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이사회 책임을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율성

밸류업 프로그램의 참여는 기업의 "자율"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서술할지, 향후 몇 년을 시계로 계획을 세울지 등 작성내용도 자율에 따릅니다.

미래지향성

밸류업 프로그램은 과거와 현재를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가치 제고를 위한 "미래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성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존에 사업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경영사항 공시 등에 산재되어 있던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두어 종합적·입체적 현황진단 및 목표·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는 "종합보고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가능성

밸류업 공시는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업종, 사업구조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 제공에 의미가 크고,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소통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11. 아시아로 확대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과 유사한 취지의 자본시장 개선 정책은 일본과 한국을 넘어 아시아 주요 시장으로 확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Power UpTW

도입 시점	2024.06
핵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정보 공시 확대 및 지속가능경영 데이터 제공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공시 강화 추진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투명성 제고 및 비재무 정보 공시 확대 투자자 이해도 및 시장 신뢰성 제고

태국 JUMP+ Program

도입 시점	2025.06
핵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중장기 전략·지배구조·기후 대응을 포함한 3년 로드맵 기반 가치 창출 전략 수립 지원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투명성 및 공시 품질 제고 투자자 접근성 및 시장 신뢰 기반 강화

싱가폴 Value-Unlock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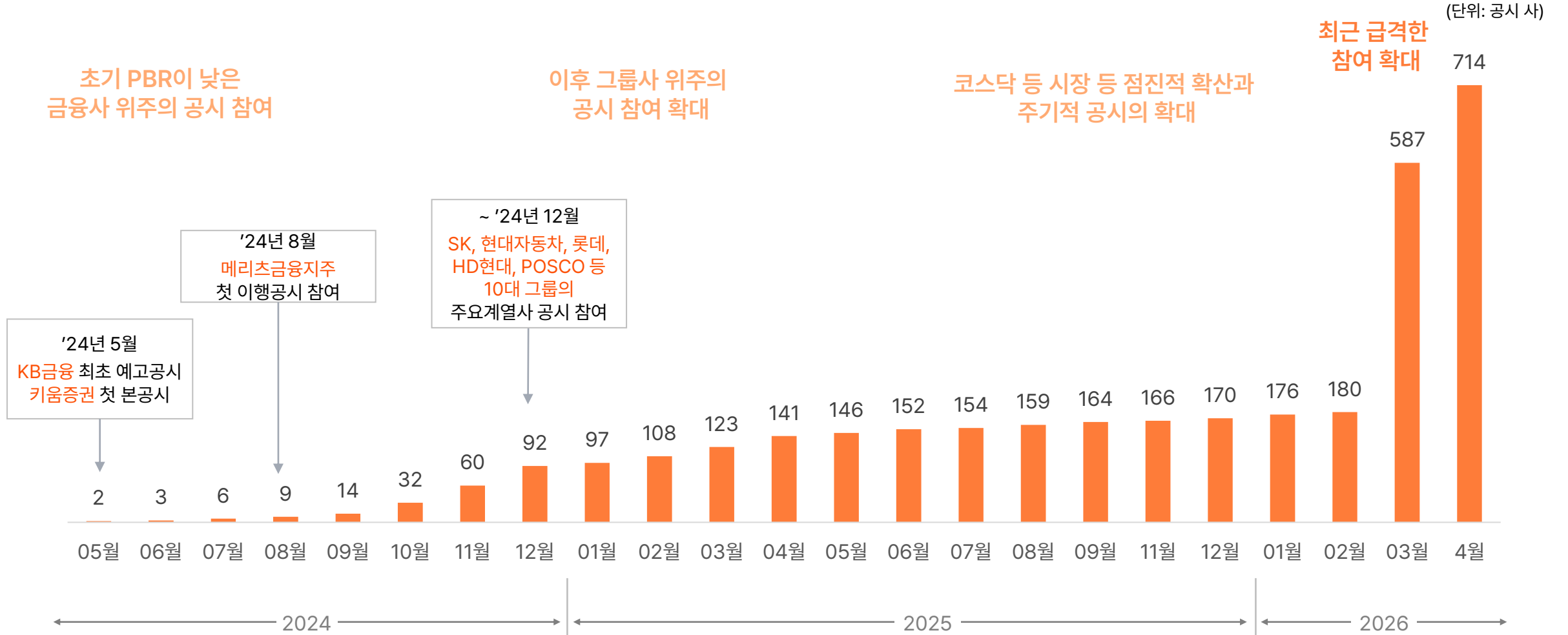
도입 시점	2026.01
핵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주가치 중심 전략 하에 자본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기업 주도의 가치 창출 유도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펀더멘털과 시장 밸류에이션 간 정합성 제고 투자자 신뢰 회복 및 시장 유동성·참여 확대 유도

말레이시아 MY Value Up Programme

도입 시점	2026.04
핵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치 제고 전략 및 KPI(ROE 등) 제시 권고 주주환원 정책 및 자본배분 관련 공시 확대 요구
정책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치 및 시장 평가 개선 투자자 신뢰 강화 및 효율적인 자본배분 유도

12. 프로그램 참여 추이

최근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공시는 기업 참여가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출처: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6.4월)」, 신규 공시 참여기업 기준

13. 고배당 공시 도입 및 정성적 목표 가능 허용

고배당 기업과 세특레 도입에 따라 첫 해 한시적 약식공시 허용과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간소화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 요건을 충족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도록 위임 ▪ '26.02.24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 ▪ 이에 따라, 고배당 요건을 갖춘 기업은 관련 공시서식 작성 및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필요 	구분	내용	
		공시기한	매년 사업연도 결산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공시 위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https://filing.krx.co.kr)	
		공시 내용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 실적*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 *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 해에 한해 간소화된 약식 공시 허용 • 작성 내용은 기업의 선택에 따르며,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가능 	

가이드라인 개정 (`26.01.22)	정량 중심 공시 기준 완화	기업별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공시 허용	공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확장
	정량적 수치 목표 제시 부담 완화를 위해 정성적 목표 및 방향성 중심 공시도 허용 → 수치 목표 제시 여부와 무관하게 공시 참여 가능	+	중장기 전략·방향성 중심의 공시를 통해 기업 특성 및 산업 환경을 반영한 유연한 공시 가능 → 기업별 상황에 맞춘 유연한 공시 내용 구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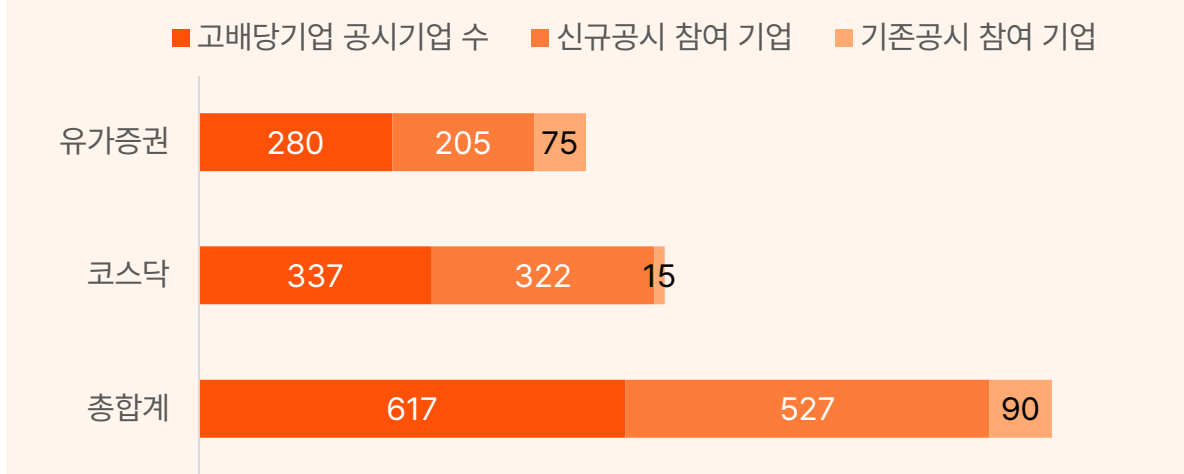


고배당 특례 및 가이드라인 완화에 따라 공시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공시의 구체성 및 질적 수준은 다소 저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 공시 급증

이러한 제도적 변화 이후 공시는 단기간 내 급증하며 참여율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공시 내용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배당기업 공시 참여 현황



- 1 신규 유입 중심의 공시 참여 확대**
 신규 참여기업(527개사)이 기존 공시 참여기업(90개사)을 크게 상회하며 공시 참여 확대는 신규 유입 중심으로 발생
- 2 코스닥 포함 시장 전반으로 공시 확산**
 코스닥 기업의 참여 증가를 통해 기존 유가증권 중심에서 시장 전반으로 공시 확산
- 3 시가총액 기준 시장 커버리지 확대**
 공시 참여 기업 확대에 따라 전체 시가총액의 약 77% 수준이 공시에 포함되며 시장 커버리지 확대

공시 내용의 실효성 및 구체성에 대한 우려

“속 빈 강정 그칠라... 밸류업 공시, 참여기업 늘었지만 ‘알맹이’는 썩”

“밸류업, 배당 넘어 성장 피하려면... 전략 공시 ‘관건’”

“세금 혜택은 챙기고 공시는 맹탕... 증권사 ‘무늬만’ 밸류업”

“삼성금융, 알맹이 없는 밸류업 공시...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주주들”



고배당 특례에 따라 약식 공시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공시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일부 공시는 정성적 서술 중심으로 구성되며 실질적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 구체적 목표지표 및 실행 로드맵 제시가 미흡한 사례 발생

- 기업별 공시 수준 및 정보 제공 범위 차이에 따른 내용 편차 발생

- 투자자 관점에서 실질적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 정보 제공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존재

출처: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26.4월)」

15. 기존 공시 사례 ① - 메리츠금융지주

간소화 이전에는 일부 기업들이 자본배분 논리와 의사결정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창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시를 제시해왔습니다.

자본배분 및 주주환원 논리의 공시와 설명

핵심은 환원 규모가 아니라, 자본배분의 결정 기준과 과정의 투명한 제시

1. 자본배분 공시의 핵심 원칙

- 자본배분 의사결정 기준의 투명한 공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간 선택 기준의 명확한 제시
-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일관된 원칙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유지
- 자본배분의 일관성과 규율 확보 일회성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주주가치 제고 중심의 운영

2. 구체적 공시 방식

- 주주환원 정책의 결정 절차 및 핵심 변수 공시 (예: COE, Forward PER 등 자본비용 및 시장평가 지표)
- 정책 변경 사유 및 계획 대비 실제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설명 정책과 실행 결과 간의 정합성을 명확히 제시

자본배분 사례: 메리츠금융지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설정

핵심지표: 총주주수익률(TSR)	실행지표: 주주환원율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핵심지표로 '총주주수익률' (Total Shareholder Return) 선정,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기업 경영	2023회계연도부터 중기 실행지표로 '주주환원율' (자사주 매입·소각 + 배당) 선정

목표달성을 위한 자본 배치 Mechanism

[내부 투자수익률,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 현금배당 수익률]
3가지 수익률 비교하여 자본 배치를 결정

- ① 내부 투자 vs. 주주환원
- ② 자사주 매입·소각 vs. 현금배당

* 주주환원의 수익률은 자사주 매입·소각과 현금배당 수익률 중 높은 것

*세후 한계 투자수익률: 투자한 자본의 세후 수익률 (e.g.) 내부 유보이익 1조를 투입해 세후 당기순이익이 1,000억 증가하면 세후 한계 수익률은 10%

**1/fwd PER :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식 수가 감소함에 따른 미래 주당 배당금의 현재가치 증가를 의미하며, 실질 수익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는 이를 forward PER의 역수로 계산하여 의사결정 (e.g.) fwd PER이 5배이면,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은 1/5, 20%로 계산할 수 있음

***COE(Cost of equity) : 시장에서 보는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의 요구수익률 e. 따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주주가치 제고 = Max(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 요구수익률)

$\frac{1}{fwd PER} > COE$ | $\frac{1}{fwd PER} < COE$

자사주 매입 비중 ↑ | 현금배당 비중 ↑



자본배분 및 주주환원을 연계하는 정책 및 실행 체계

- 수익률 비교에 기반한 자본배분 의사결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시
- 내부 투자와 주주환원, 주주환원 내 배분 구조를 단계적 의사결정 체계로 구분하여 설명
- 내부 투자수익률,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 및 배당 수익률 간 비교 기준을 명확히 제시

16. 기존 공시 사례 ② - 롯데지주

계열사 통합 공시와 주주환원 기준 정립 등을 통해 기업별 정책의 일관성과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합 공시 기반 주주환원을 정의 고도화

통합 공시 기반 주주환원을 정의 정교화를 통해 주주환원 정책의 체계성과 전달 일관성 확보

1. 그룹 차원의 주주환원 정책 일관성 확보

- 계열사 단위 공시를 통합함으로써 그룹 전반의 주주환원 방향성을 일관되게 전달
- 분산된 정보 제공에서 통합된 메시지 체계로 전환

2. 주주환원을 해석 가능성 및 신뢰도 제고

- 주주환원을 정의 및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투자자 관점의 해석 용이성 확보
- 자사주 소각 등 구성 요소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오해 가능성 최소화

3. 시장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 및 투명성 강화

- 주주환원 정책, 지표, 공시 간 연계를 통해 설명 일관성 확보
- 투자자 대상 커뮤니케이션의 신뢰도 및 정보 전달력 제고

통합 공시 기반 주주환원 설명 프레임 사례: 롯데지주



계열사 공시의 통합 제시

- 계열사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사전 공시 후 지주 차원에서 통합 제공

주주환원을 정의 및 설명 구조 정교화

- 차별화된 주주환원율 산식 별도 제시
- 배당 및 자기주식 소각 범위 등 구성 요소를 명확히 규정
- 자사주 성격 및 반영 기준 등에 대한 추가 설명 제공

롯데지알에스

- 사업현황 및 목표
 - COVID19 후, 체질 개선을 통한 흑자전환
 - 목표: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상승
- 실행계획
 - 수익성 향상 통한 투자재원 확보
 - 롯데라이프(코스피)코일 브랜드 및 수익성 강화
 - 엔제닉스(한미약품)
 - 신규사업 투자 통한 사업포트폴리오 확대
 - 한세신 사업 확장 및 신규 브랜드 런칭

롯데웰푸드

- 재무적 목표
 - '28년 해외 매출 비중 35% 이상
 - '28년 ROE 8~10%
- 주주환원 정책
 - 평균 주주환원율(연결) 35% 수준
 - 중간배당 실시

롯데칠성음료

- '28년 매출액 5.5조원
- '28년 ROE 10~15%
- '28년 부채비율 100% 이하
- '28년 주주환원율(연결) 30% 이상
- 중간배당 실시

롯데쇼핑

- '30년 매출 20조, 영업이익 1.3조
- '30년 해외사업 매출 3조
- 주주환원율(연결) 35% 이상
- 최소 주당배당금 3,500원
- 중간배당 실시 검토

'24~'26 3개년 주주환원 정책 현금배당과 자사주 소각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기대 가능한 정책 운영으로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

- 중간배당 도입 검토
- 자기주식 소각 검토
- 배당기준일 변경 추진?

현금배당 + 자기주식 소각 = 주주환원율 35% 이상 지향

2019 1,100 | 2020 1,000 | 2021 1,500 | 2022 1,500 | 2023 1,500 | 2024 | 2025 | 2026

[별첨 4] 주주환원율 정의

- 본 보고서의 주주환원율 정의를 통상적인 주주환원율 정의와는 달리 아래와 같이 정의함
 - 주주환원율 = (당기 총배당금액 + 당기 자기주식 소각액) /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 100
 - 1. 자기주식 소각액은 기준 보유 자사주 소각분(소각시점 종가로 금액 환산)에 한함
- 당사의 자기주식 34,183,265주(보통주 34,103,937주 · 우선주 79,328주)는 2017~2018년에 걸친 그룹 지주사 출범에 필요했던 자회사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것임
- 이는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니어서 기존의 주주환원율 개념으로 포섭이 어렵지만, 이를 소각하는 것이 Overhang (잠재 매도물량) 감소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주환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자명하므로 이러한 정책을 안내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의 주주환원정책 및 주주환원율 개념에 이를 반영
-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의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설명 드림. 회사는 회사의 주주 또는 투자자 등이 본 자료의 주주환원율 개념을 참고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타 본 자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아니함

17. 기존 공시 사례 ③ - LG이노텍

목표 대비 이행 경과와 변동 요인을 설명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신뢰성과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공시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목표 기반 이행 설명을 위한 투자자 소통 체계

이행공시는 목표 달성 여부가 아닌, 목표 대비 변동 요인과 이행 경과의 설명 구조

1. 목표를 기준으로 한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 중장기 목표를 중심으로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며, 목표를 단기 성과 기준이 아닌 이행 경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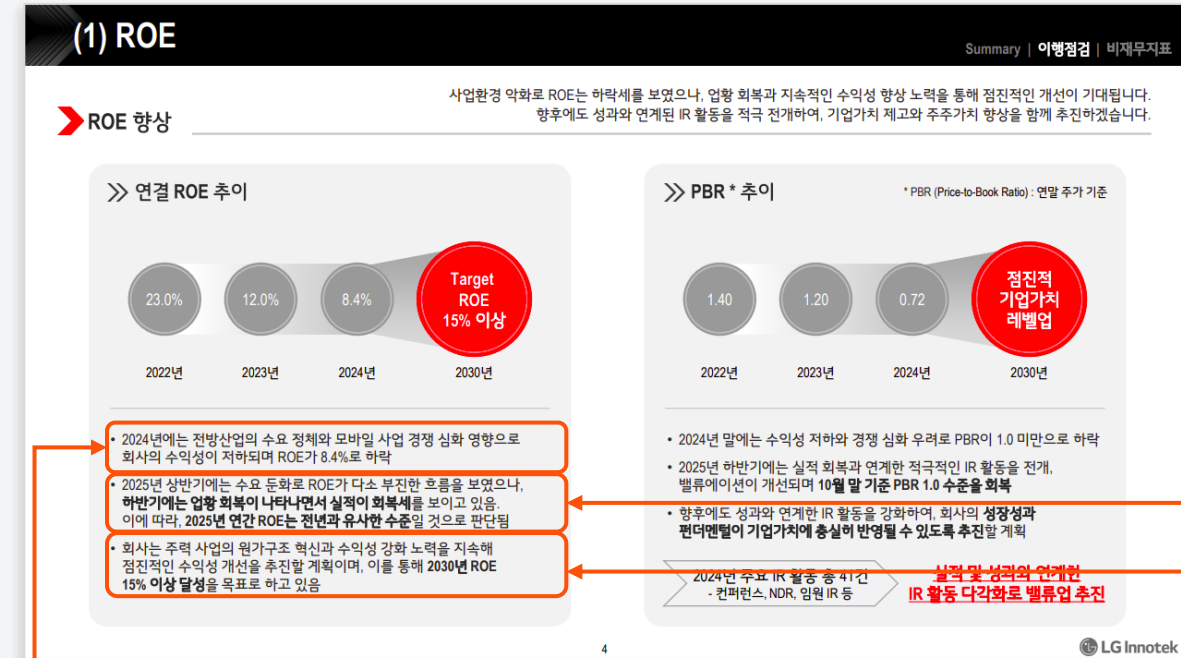
2. 목표 대비 성과 변동에 대한 설명

- 단순한 성과 결과의 제시를 넘어, 목표 대비 괴리 발생 요인과 성과 변동의 배경을 함께 설명
- 외부 환경 변화 및 실행 요인이 성과에 미친 영향을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해석 가능성 제고

3. 투자자 인식에 대한 효과

- 성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투자자 신뢰를 강화
- 실적 변동과 밸류에이션 간 정합성 확보를 통해 합리적 투자 판단 기반 제공

이행공시 사례: LG이노텍



기대 수준 형성을 위한 회복 전망 제시

- 공시를 통해 업황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를 전달함으로써, 향후 성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을 제시

중장기 목표를 평가 기준으로 유지

- 중간 성과 변동에도 불구하고 ROE 15% 이상 목표를 재확인함으로써,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방향의 기준을 유지

단기 실적 하락을 일시적 변동으로 설명

- ROE 하락을 산업 수요 둔화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함으로써, 단기 성과 변동과 구조적 악화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시

18. 공시 방향성의 변화① - 고배당기업 약식공시 사례

반면, 최근에는 약식공시가 가능해지면서 기업별 전략이나 의사결정 논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공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KIND 삼성전자 (005930)

본 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03.19)
첨부서류: 첨부문서선택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 설정>

- 메모리, Foundry, 선단 패키징을 모두 갖춘 'One-stop solution'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로서 AI 반도체 시대에 주도권 확보
- HBM 등 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 업계내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초격차 유지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최고의 제품 경쟁력 확보
- AI 선도기업으로 도약 및 신성장 포트폴리오 사업 강화
 - AI 기반 혁신을 바탕으로, AI 및 첨단로봇 등 미래형 사업 구조로 사업을 재편하여 중장기 성장 모멘텀 확보

2. 주요 내용

□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 주주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

<계획 수립>

- AI 반도체 시대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년에 총 110조원 이상의 시설 및 R&D 투자 집행 계획
- 첨단로봇, MedTech, 전장, HVAC 등 미래성장 분야에 의미있는 규모의 M&A 추진
- 4기 주주환원 정책 이행 실적 및 계획
 - '24-'25년 : 현금배당 20.9조원(정규 19.6, 추가 1.3) 및 소각 목적 자사주 매입 8.4조원
 - '26년 : 3년간 총 Free Cash Flow의 50% 중에서 '24-'25년 주주환원 및 '26년 정규배당(9.8조원) 이후에도 잔여재원 발생시 추가로 환원

KIND 오뚜기 (007310)

본 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03.27)
첨부서류: 첨부문서선택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주)오뚜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업개요>

- 식품 제조 및 판매 등 영위

<현황진단>

- 국내 및 해외시장의 지속적 매출 증대
- 중장기(2024년~2026년) 배당정책 수립 완료
- 장광개정을 통한 배당절차 개선(先 배당액 확정, 後 배당기준일 지정) 완료

2. 주요 내용

<목표설정>

- 향후 3년간 자본적 지출(CAPEX) 규모 유지
- 중장기 배당규모 검토를 통한 안정적인 주주환원 지향
- 미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 등 해외 매출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진

<계획수립>

- 2027년 안양 도시형 신공장 준공
-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2027년~2029년) 예정
- 다양한 신제품 연구 개발 및 적극적인 국내외 영업활동 실시

<소통>

- 영문 홈페이지 개설 및 영문공시 확대

KIND SK케미칼 (285130)

본 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03.25)
첨부서류: 첨부문서선택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SK케미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 설정>

- 기존 핵심 사업(Copoly/Monoer) 경쟁력 강화
- 기능·바이오소재 독자 전환
- Recycle Solution 수직 계열화를 통한 사업 기반 확보
- Pharma 사업 외형 성장
- NU 안정적인 운영 통한 매출·수익성 확보

2. 주요 내용

<계획 수립>

- Copoly/M
- 기능·비
- Recycle Value 고객
- Pharma
- NU : 분

KIND LS증권 (078020)

본 문: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2026.03.25)
첨부서류: 첨부문서선택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1. 계획서 명칭: 2026년 LS증권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설정>

-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다변화된 성장기반 확보
- 재무 건전성 기반의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정책 강화

2. 주요 내용

[계획수립]

- 체질에 맞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 리스크관리 체계 고도화 및 운용 효율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구조 확보 지속
- 자본 적정성과 금융 환경을 고려한 주주환원 정책 수립 및 기업 밸류업 실천 방안 지속 모색
- 생산적 금융 및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고려한 혁신·성장분야 지원 역량 강화

출처: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

19. 공시 방향성의 변화② - 정성적 목표 제시를 통한 참여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정량 목표 설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략 및 방향성 중심의 추상적 목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 1: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03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01 기업개요 02 사업현황 03 목표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04 주주 환원 및 소통 계획

글로벌 시장 확대,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강화 및 다각화, 다양한 사업 간 시너지 극대화로 사업을 성장시키며 지속적인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제고



GLOBAL EXPANSION

아티스트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해외 현지화 아티스트 육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아티스트 포트폴리오 강화 및 다각화

주요 아티스트의 지속적 성장
신규 아티스트 육성
다양한 유형의 아티스트 다각화



사업 영역 간 시너지 극대화

음악-MD-플랫폼 등 주요 사업 영역 간
통합 Value-chain 구축 및
시너지 확대

사례 2: 남양유업

2026년 남양유업(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당사는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목표 설정

-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통한 주당 가치 증대 및 투자자 예측 가능성 제고

나. 계획 수립

- 당사는 향후에도 고배당 기업으로서 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배당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 자기주식 취득은 연도별 경영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검토 및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2026 (주)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6년 남양유업(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 최근의 변화

공시는 확대되었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기업별 전략과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공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본래 취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초기	최근
공시 내용의 구성	자본배분, 투자·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가치 창출 구조를 중심으로 공시 내용 구성	약식공시 형태임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별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설명 없이 단순 요약 중심 공시 증가
전략 및 의사결정 반영	내부 투자, 배당, 자사주 활용 등의 의사결정 기준과 연계된 전략적 설명 포함	자본배분 기준이나 전략적 판단 근거 없이 일반적인 수준의 방향성만 반복적으로 제시
공시 내용의 차별화 수준	기업별 사업모델과 재무구조를 반영한 차별화된 공시 내용 제시	기업 간 차별화 없이 유사한 표현과 구성으로 작성된 공시 다수 확인
목표 설정 방식	ROE, TSR, 배당성향 등 구체적 정량 목표를 기반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정량 목표 제시 없이 방향성 또는 정책 수준의 선언적인 정성적 목표 중심 제시

21. 향후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한 논의

최근 공시 변화에 따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역할과 방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약식 공시는 한시적 조치로, 향후 완결성 있는 공시로 전환 필요

공시 의무화 논의 확대와 공시 충실성 제고 방향

KRX
한국거래소

세상의 가치를 더해주는 금융혁신 플랫폼

보도참고자료

보고	배출 즉시	배출	2026. 4. 15(수)
담당부서	경영지원본부 기업발표 및지침부	문의	조진우 부장(02-3774-4030) 최성규 팀장(02-3774-4031)

제 목 : 고배당기업 등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안내

◆ 한국거래소(이사장 장은보)는 최근 고배당기업 등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배당기업) '25.2.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된 바와 같이, 고배당기업에 대하여 배당소득 과세특례 시행 첫 해인 금년에 한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금융위원회, '25.2.24).
- 이는 2월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허용된 조치입니다.
-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식 공시- 한시적 조치

- 정성적 서술 중심 공시 증가 및 이에 대한 시장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래소는 약식 공시를 한시적 조치로 설명하며 향후 공시 체계 강화 방향을 제시

향후 방향

- '27년부터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및 소통을 포함한 완결성 있는 공시 제출 의무화
- 구체적 목표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공시 중심으로 제도 운영 강화 예정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2주년을 계기로 자율공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적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도 운영도 참여 확대에서 공시의 충실성 제고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

의무화 필요성 제기

-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2주년 세미나('26.05.27)에서 자율공시 체계 하에서는 공시 참여 확대 및 표준화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 제기
- 이에 따라 일부 기업군(저PBR 기업, 대형사 등)을 중심으로 단계적 의무화 도입 필요성 논의
- 형식적 공시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화와 병행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함께 강조

제도 운영 방향 변화

- 기업가치 제고 공시는 단순 공시 참여를 넘어 투자자 이해를 위한 핵심 정보 제공 수단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점 강조
- 형식적 공시가 아닌 실질적 변화 유도를 위한 제도 운영 필요성 제기
- 제도 확산 단계에서 경영의 '상식'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정책 방향 제시



제도 초기 완화 조치에 따라 공시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향후에는 공시의 질적 수준 제고 중심으로 관리 강화 예정

출처: 한국거래소 고배당기업 등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관련 안내(2026)

Thank you

IFRS 18의 MPM 공시

2026. 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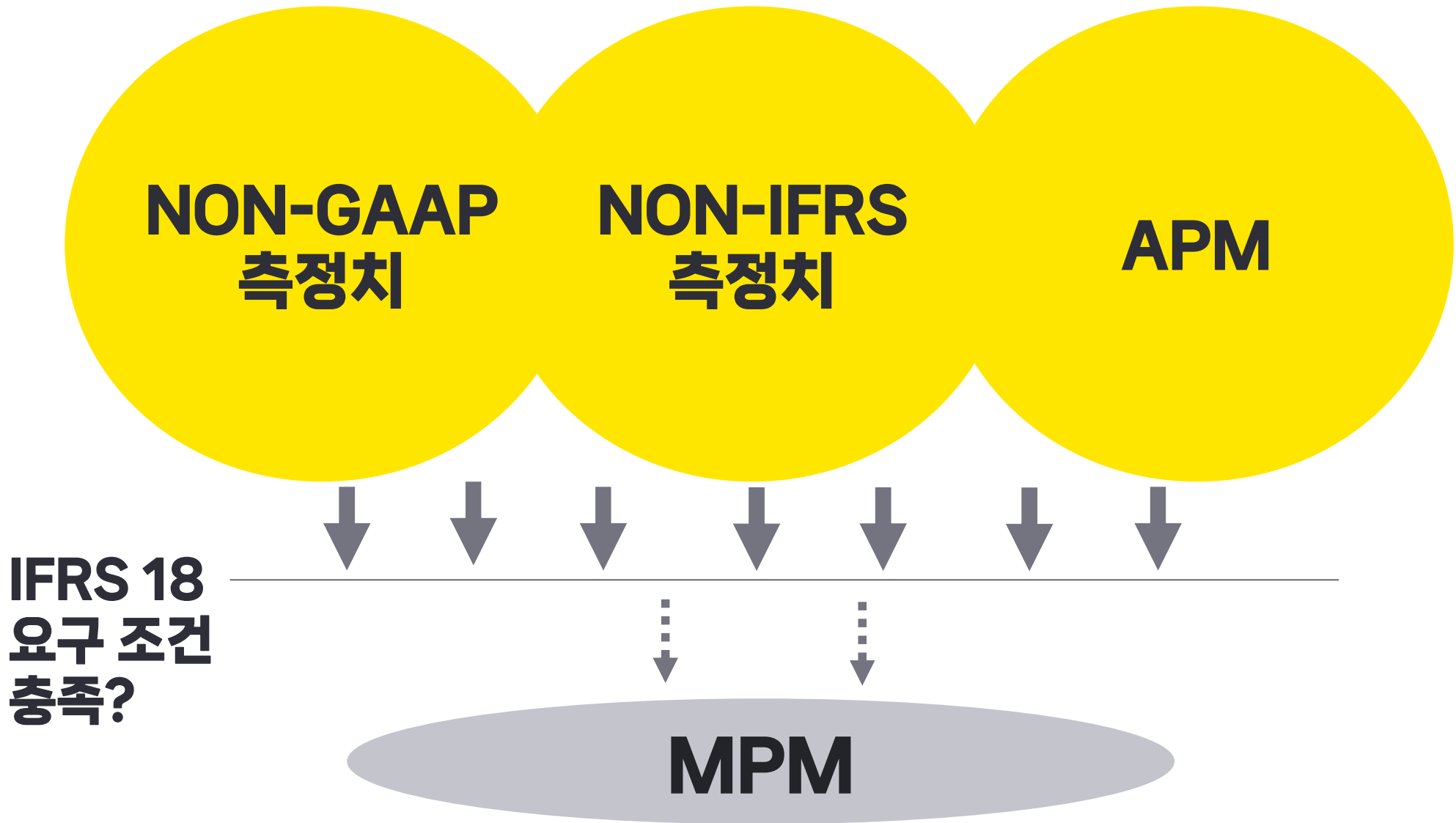
EY한영회계법인 김동길(품질관리실/IFRS DESK)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PM: 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
MPM: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Non-GAAP 측정치 사용 현황

미국

S&P 500

97%

Non-GAAP 측정치
사용
(2024기준)

유럽

EUROSTOXX 600

74%

APM 사용
(2021~2022기준)

한국

KOSPI 100대 기업

20~30%

???

출처

미국: PWC, 2024, Earnings with a twist: 2024 update on SEC staff non-GAAP comment trends

유럽: Tomáš Zahradníček, 2024, Non-IFRS Earnings Measures in Annual Reports of European Companies , European Financial and Accounting Journal Vol 19, No 2

Non-GAAP 측정치 사용 – 국내 사례(KOSPI100대 기업)

업종	대표기업	주로 사용하는 지표	특징
IT/플랫폼/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justed EBITDA Adjusted operating profit Segment prof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활발하게 사용 약 60~80%가 사용
2차전지/바이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배터리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djusted EBITDA Pipeline 기반 K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장성 강조 필요 약 40~60%가 사용
반도체/대형 제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보조지표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영업이익 중심 약 20~30%가 사용
자동차/중공업	현대차, 기아, 조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0~20%가 사용
금융	은행,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산업 약 10% 미만 사용

Non-GAAP 측정치 사용 – 국내 사례(KOSPI100대 기업)

업종	대표기업	주로 사용하는 지표	특징
IT/플랫폼/인터넷	네이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상 이익이 기업의 성과 및 사업 경쟁력을 적절하게 반영 못함 주식보상비용 콘텐츠 투자비 M&A 관련 무형자산 상각 사업 초기에는 비용>수익 글로벌 Peer와 비교 용어: adjusted EBITDA 	
2차전지/바이오	삼성바리업체		
반도체/대형 제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보조지표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 영업이익 중심 약 20~30%가 사용
자동차/중공업	현대차, 기아, 조선/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 10~20%가 사용
금융	은행,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 산업 약 10% 미만 사용

우리 나라 기업이 Non-GAAP 측정치를 사용하는데 소극적인 이유

- **Non-GAAP 측정치가 활용될 유인이 낮음**

- Non-GAAP 측정치가 활발하게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굳이 새로운 측정치를 개발할 유인이 낮음
- 제3자가 검증한 재무제표의 수치로 공시

표준화된 정보를 강조,
자율적 측정치 공시보다 감사
받은 재무정보 중심

- **Non-GAAP 측정치에 대한 명확한 제도 부재**

- 체계적인 Non-GAAP 측정치 규정 없음
- Non-GAAP 측정치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인식

오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보수적으로
처리

- **감독당국의 태도**

- 허위공시를 부정경쟁 요소로 보고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봄
- IR 이나 공시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경우 투자자 오해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업들이 Non-GAAP 측정치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

- **투자자 구조 차이 및 공시 채널 구조**

- 해외의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중심인 반면 한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큼
- Call 중심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 VS. DART 공시/정형화된 공시 위주

Non-GAAP은 오해 가능성이
높아서 IR 스토리텔링 여지 제한

Non-GAAP 측정치 사용 - 해외 사례

업종	주요 Non-GAAP 지표	주요 조정 항목	공시 목적
반도체	Adjusted earnings, Free Cash Fl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기준보상비용 무형자산 상각 구조조정 비용 및 인수 관련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도체 기업 특성상 보상 및 인수 관련 비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고 핵심 영업 성과를 표시
유통	Non-GAAP EPS/margin Constant currency revenue/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 비용(매장 폐쇄, 조직 정비) 거래 관련 비용 환율 효과 제거 (constant currency: 전기 또는 기준 시점 환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 또는 매장 폐쇄 등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여 정상 영업 수익성 강조 글로벌 기업 특성상 환율 영향 제거
건설	Adjusted EBIT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관련 일회성 손익 소송비용 및 클레임 자산손상 및 구조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프로젝트 특성상 특정 기간 손익 왜곡 제거 프로젝트 단위 변동성 제거
금융	TBV, Core earnings (TBV: 총자본-영업권-무형자산, 실제 청산시 회수 가능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가치 변동 신용충당금 변동 구조조정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건전성 및 정상 수익력 강조

미국 기업이 Non-GAAP 측정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중심 자본 시장

- 미국 상장기업의 97%가 Non-GAAP 지표 사용
- 투자자에게 경영진이 보는 핵심 성과를 전달하기 위한 주요 IR 도구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고
핵심사업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 애널리스트 중심 시장 구조

- 미국은 애널리스트의 forecast가 Non-GAAP인 경우가 많음

Non-GAAP 측정치가 사실상
'시장 언어'

• 무형자산·혁신기업 비중

- R&D, 플랫폼 기업 등은 GAAP 이익이 실제 성과를 왜곡 가능
- 주식기준보상비용, 비용화된 무형자산 투자 등

Non-GAAP 측정치가 없으면
Valuation이 어려움

• '금지'가 아니라 '통제'

- Non-GAAP 사용 자체 허용
- GAAP와 reconciliation 의무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동시에
공정한 공시를 의무화

유럽 기업이 APM(Alternative Performance Measures)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

- IFRS는 기업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 IFRS의 목적은 글로벌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획일적인 기준임
-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 산업 특성 반영이 제한

Adjusted profit / EBITDA 등을 통해 기업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

- 투자자 의사결정을 지원

- IFRS는 과거 정보 중심/획일적인 비교가능성을 중시
- 반면 투자자는 미래 earnings / CF 정보 필요

미래 earnings 예측에 유용한 정보 제공

- 무형자산·신경제 반영 한계

- R&D 투자의 비용화
- 브랜드/플랫폼 등 내부 생성 무형자산 반영 미흡

회계상 이익과 경제적 성과의 괴리를 보완

- 규제 환경

-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가 APM을 공식적으로 인정
- APM Guideline 정형화

기업은 APM을 적극 사용하고 규제는 "표시 방법"만 통제

Non-GAAP 측정치의 사용에서 발견된 문제점

- **비교가능성 저하**
 - 동일 이름(예, EBITDA)이라도 구성 항목이 다름
 - Non-GAAP 측정치 종류와 정의가 비표준화
- **경영진의 cherry picking이 가능함**
 - 어떤 항목을 제외할지 명확한 기준 없음
 - 비용은 조정하고 이익은 유지하는 선택 → 시장 기대치를 맞출 수 있도록 조정 가능
- **이익 상향 효과 관측**
 - EU STOXX600 기업의 70~78% 기업: 조정이익 > IFRS 이익
 - 평균적으로 2021: +4.4%, 2022: +8.3%
- **재무제표 체계와 불일치**
 - IFRS는 APM을 정의 안함
 - 재무제표와 APM간 연결고리가 없고 사용자 혼란이 발생
- **공시 품질 문제**
 -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 조사 결과 APM을 사용하는 기업의 17%에서 규정 위반 발생

출처: Tomáš Zahradníček, 2024, Non-IFRS Earnings Measures in Annual Reports of European Companies, European Financial and Accounting Journal Vol 19, No 2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성과 측정치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IFRS 18에서 MPM을 개발

APM Guideline과 IFRS 18의 MPM 요구사항은 거의 유사함

구조	APM Guideline 요구 사항	이에 대응되는 IFRS 18의 MPM 요구사항
정의 설명	APM 정의 및 계산 방식 설명할 책임	MPM 정의 및 구성 요소 설명 필수
차이 조정	IFRS 수치와 차이 조정할 책임	IFRS 중간합계와 차이 조정 필수
목적 설명	왜 APM을 사용하는지 설명할 책임	MPM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필수
일관성	기간간 일관성 요구 + 변경시 변경 이유 등 설명	기간간 일관성 요구 + 변경시 변경 이유 등 공시
비교기간 정보	비교기간 정보 제공	비교기간 정보 제공
명칭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 금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명칭
IFRS보다 우위 금지	IFRS보다 강조 금지	명시적인 요구 사항 없음
위치	IR, MD&A, 보도 자료 등 다양한 곳에 산재	(다양한 곳에 산재된 MPM 요건을 충족하는 수치를) 재무제표 내 하나의 주석에 모아서 공시
차이	x	기업이 재무제표가 아닌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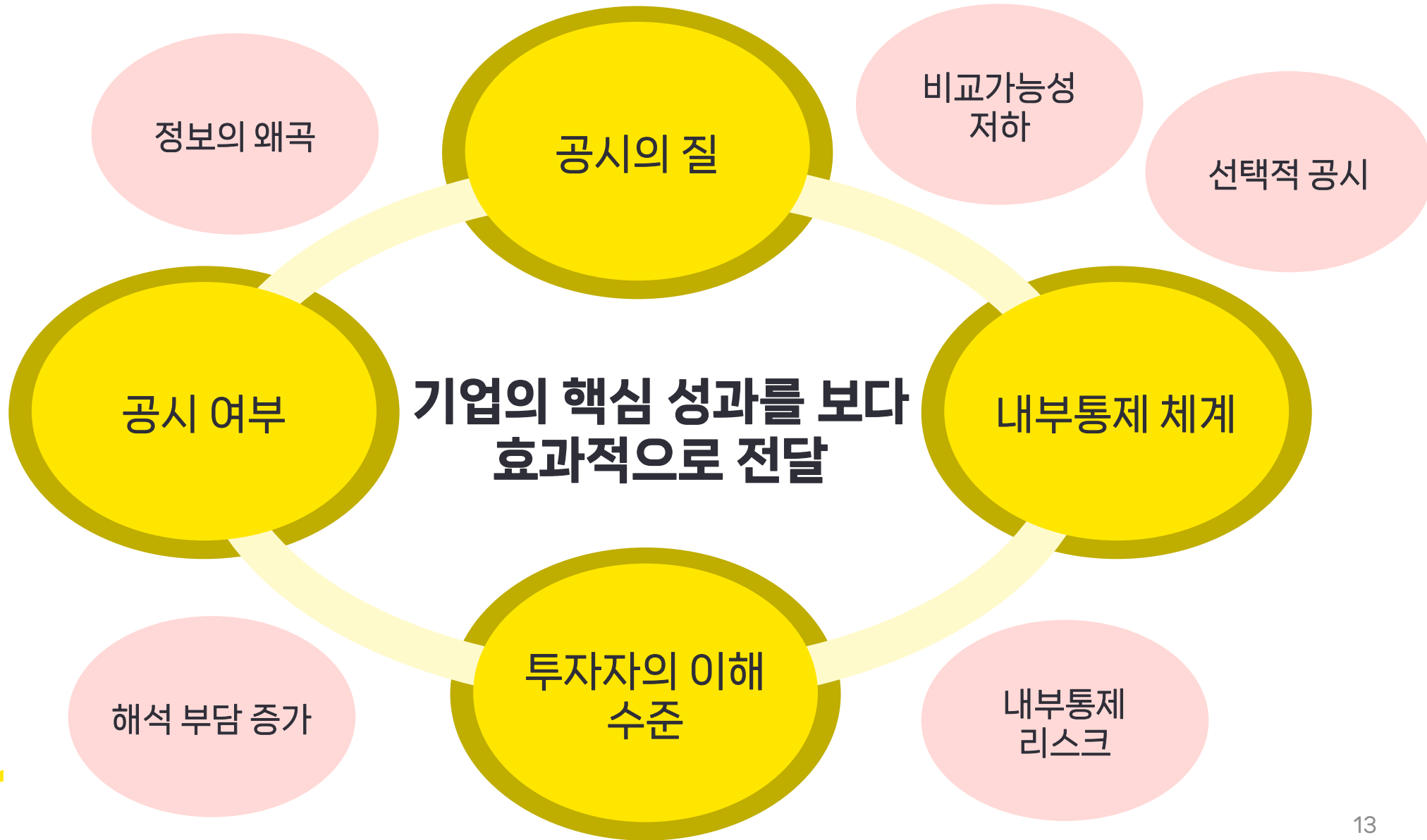
IFRS 18 MPM의 한계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투명성 개선 기대 **VS. APM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속제**

항목	APM의 구조적 한계	IFRS 18의 개선
기업간 비교가능성	동일 이름 그러나 다른 구성 예, Adjusted EBITDA의 구성항목 다양	정의 및 구성항목 공시를 강화 IFRS 수치와의 Reconciliation 강제 그러나 구성항목을 통일시킬 수 없음
Cherry picking	어떤 항목을 비경상 항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비용을 조정하고 어떤 이익은 유지할 지를 경영진의 재량으로 선택	경영진의 견해로서 조정된 중간합계가 왜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함 그러나 판단을 제한하지 아니함
이익 상향 편향	비용은 제거하고 이익은 유지	IFRS 수치와의 Reconciliation 강제 하고 주식 사항으로서 감사 대상에 포함 그러나 어떤 항목을 제거할지는 여전히 경영진 재량

맺음말

어떤 MPM이 투자자에게 유용하고 이를 위해 어느 수준의 통제와 설명이 필요한가?



Q & A

Append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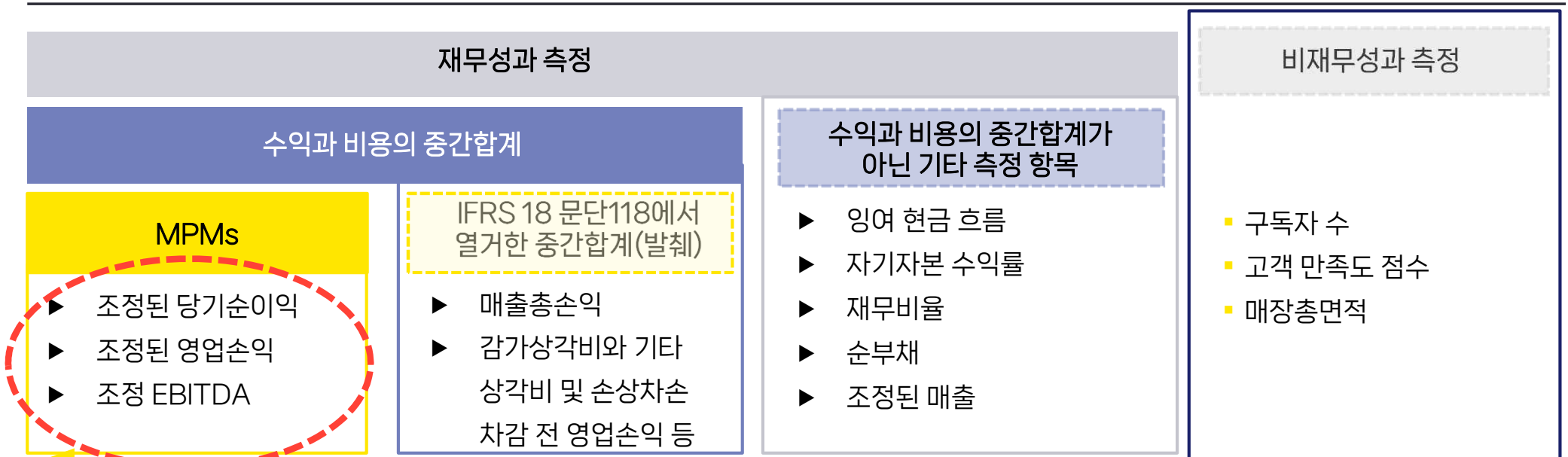
IFRS 18 – MPM 일반 사항

IFRS18 – MPM 일반 사항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의 식별

- K-IFRS 회계 기준에서 특정한 중간합계를 제외한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임(문단117)
 - (1) 기업이 재무제표가 아닌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 (2)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 (3) K-IFRS 제1118호 문단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K-IFRS 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중간합계

성과 측정



IFRS18 – MPM 일반 사항

▶ MPM 공시 요구 사항

-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MPM과 반드시 비교 가능한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
- 경영진의 견해로서, MPM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
- MPM을 산출하는 방법
- IFRS 회계기준 상 중간합계와 MPM 간 차이 조정내역
- 차이조정내역에 공시된 각 항목의 법인세 효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효과
-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
- MPM의 변경 또는 그 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그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추가, 종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

차이 조정 주식 공시 사례(제1118호 예시 발취)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	조정항목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손상차손	구조조정비용	유형자산처분 이익	
기타영업이익		-	-	(1,800)	
연구개발비		1,600	-	-	
일반관리비		-	3,800	-	
영업권 손상차손		4,500	-	-	
영업이익 / 조정영업이익	57,000	6,100	3,800	(1,800)	65,100
법인세비용		-	(589)	297	
계속영업이익 / 조정계속영업이익	32,100	6,100	3,211	(1,503)	39,908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305	161	-	

Quick question?(1/3)

 K-IFRS 제1118호가 시행된 이후, 제1001호의 영업손익을 사용해서 IR을 한다면 이를 MPM으로 식별하는가?

- 제1118호 문단 한132.4에서 제1001호의 영업손익을 주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MPM 요건을 미충족함
- MPM으로 식별되기 위한 조건

K-IFRS 회계 기준에서 특정한 중간합계를 제외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임(문단117)

- (1) 기업이 재무제표가 아닌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 (2)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데 사용한 수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
- (3) K-IFRS 제1118호 문단118에서 열거하지 않은 것이거나 K-IFRS 회계기준에서 표시나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중간합계

 MPM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 아니오. 다만, MPM이 없을 경우 없다는 사실을 주식 공시

Quick question?(2/3)


영업이익에 가상의 수익과 비용을 가감해서 IR을 한다면 이것도 MPM에 해당하는가? ('26.6월 IFRS IC 안건)

- 예, 부동산 기업이 보고일 현재 임대료 수준을 12개월로 환산한 연환산 임대수익을 사용하거나, 팬데믹 등 중대한 위기가 없었다라면 달성했을 순이익을 추정하거나 또는 사업결합이 보고기간 초에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프로포마 매출총이익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경우
- IFRS IC 스태프 분석(IFRS IC 회의 전):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서 MPM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가상의 수익과 비용을 가감하더라도 MPM에 해당함


비밀 유지를 전제로 제한된 주주 그룹 또는 잠재 투자자에게만 제공된 IR 자료가 공개적인 의사소통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26.6월 IFRS IC 안건)

- IFRS IC 스태프 분석(IFRS IC 회의 전): 특정 커뮤니케이션이 공개적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기업이 전문가적 판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Quick question?(3/3)

 3분기까지 조정영업이익으로 IR을 하다가 연차재무제표에서 조정영업이익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3분기까지 IR에 사용된 조정영업이익을 연차재무제표에 MPM으로 공시해야 하는가?

- 아니오
- MPM은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과 관련된 것임

 종속기업A가 조정영업이익으로 IR을 했고 그 수치는 종속기업A의 수준에서 MPM의 요건을 충족함. 이 때 종속기업A를 포함한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이 MPM으로 식별한 수치를 연결재무제표의 MPM으로 항상 식별해야 하는가?

- 아니오
- 연결실체 전체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반영하는지 평가하여야 함

 전기까지 식별되었던 MPM을 당기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을 때 전기 MPM의 reconciliation 공시가 반드시 필요한가?

- 아니오.
-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MPM의 변경, 추가, 종단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비교정보를 공시해야 함
- 따라서 해당 MPM에 대한 공시(조정표를 포함하여)가 비교기간 공시에서는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Q & A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rnst & Young Han Young
© 2026 Ernst & Young Advisory,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설문 의견서 및 향후 이슈

2026. 6.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회
정준희(대구대학교), 기도훈(한밭대)

**본 자료는 한국회계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연구·교육위원회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와 의견은 설문에 참여한
회원 및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전문적
견해이며, 한국회계학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의견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위원회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원장: 전규안(숭실대)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장: 정준희(대구대)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 기도훈(한밭대),
박성종(한경국립대), 손혁(계명대),
전홍민(성신여대), 정광화(강원대), 최종원(연세대)**

목차

- I. 연구배경
- II. 설문개요
- III. 설문결과
- IV. 최종의견

- 지난 2026년 2월 25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국정과제 46-3) ESG 공시·평가 인프라를 제고하고, ESG 공시 신속 추진
 - 국제적 정합성, 투자자 유용성, 기업의 수용성 등 고려하여 관계부처·이해관계자 협의 후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 마련

- IFRS 재단 등 국제기관과 EU 등 주요국은 ESG 관련 정보가 “투자정보”로서 가지는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공시제도 개편을 검토
 - '24년 이후 미국 SEC는 기후공시 추진을 보류했으나, 그 외 국가는 기후 공시 의무화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상·시기 조정, 면책 등을 통해 공시 부담을 합리화

□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 (EU) 지속가능성정보공시지침(CSRD)*에 따라 '25년부터 단계적 공시가 시작되었으나, 규제완화 추진**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 '25.2월~)
 - (일본) '25.3월 공시기준 확정 후 '27.6월**'부터 시총 3조엔 이상 프라임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로드맵 확정
 - (영국) '26.2월 중 공시기준 확정 예상, '28년부터 대부분 상장 기업에 대한 기후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 의견수렴중*
 - (홍콩·싱가폴·호주) '26년**'부터 IFRS 기준 기반 의무공시 단계적 시행
- * (스코프3) 홍콩 : 항생종합라지캡지수 포함 상장기업에 한해 '27년 의무공시, 싱가포르 : Straits Times Index 지수 포함기업(시총 상위30개사)에 한해 '27년 의무공시, 호주 : 그룹별로 최초공시 시기로부터 1년 유예

< 기본 방향 >

- ① (국제적 정합성) EU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제도, ISSB의 글로벌 기준과 일관성 있게 제도를 설계
- ② (기업의 수용가능성)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및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한 이행계획 수립
- ③ (정보 유용성)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ESG 정보를 제공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의견수렴안 (요약)

공시 시기 및 대상(案)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 [예] '29년(FY28) 연결자산총액 10조원, 그 이후는 추후 검토

※ 다만, 공시 첫해에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에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 종속회사는 연결대상 제외된 공시 허용

스코프3 유예(案)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부터 공시(공시대상별로 3년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해외탄소규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우선 공시 면제 후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 재검토

공시 기준

-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IFRS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하되, 국내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 완화

공시 채널(案)

-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 공시 전환

이행 지원(案)

- 스코프3 등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 세부 가이드라인 제공, 파일럿 테스트 운영, 교육 등 공시이행 지원

- 관계부처 합동 스코프3 관련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 한국회계학회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견수렴안)」에 대해 학문적·실무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

- 본 의견서는 한국회계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조사기간: 3월 25일~3월 31일, 응답자 127명: 교수 77명, 박사 9명 등)를 기반으로 작성.
 - 응답자는 평균 10년 이상의 ESG 관련 연구 및 교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본 설문은 학계의 전문적 판단과 실무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음
 - 설문은 응답자 특성, 사전적 테스트 문항, 본 질문으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에 대해 비율 중심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형 문항은 긍정·부정 응답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순위선택형 문항은 각 순위별 비율과 총선택 비율을 제시
 - 설문조사 (구글폼으로 실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2eah3inDzfU2BParfnNR7DJCoOHSwxqoZjyr7wvcwCPF3w/formResponse>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 기본 방향 >

- ① **(국제적 정합성)** EU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제도, ISSB의 글로벌 기준과 일관성 있게 제도를 설계
- ② **(기업의 수용가능성)**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및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한 이행계획 수립
- ③ **(정보 유용성)**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ESG 정보를 제공

설문질의

- (1) 귀하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다음 지속가능성 공시정보 중에서 귀하가 투자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정보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 (3) 기존의 지속가능보고서가 투자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 다음 질적특성 중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3가지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 (4) ESG 공시(IFRS S1 S2)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우려하는 3가지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 3)
- (5) 귀하는 ESG 공시(IFRS S1 S2) 의무화가 현재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교하여 질적특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질문 1) 귀하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비율	응답자 수
매우 유용하다	37.01%	47
다소 유용하다	46.46%	59
보통이다	9.45%	12
다소 유용하지 않다	6.30%	8
전혀 유용하지 않다	0.79%	1
합계	100%	127

항목	교수(학계)	회계법인	기타
매우 유용하다	42.5%	8.3%	50.0%
다소 유용하다	41.4%	66.7%	43.8%
보통이다	8.1%	20.8%	0.0%
다소 유용하지 않다	6.9%	4.2%	6.3%
전혀 유용하지 않다	1.2%	0.0%	0.0%

설문결과

질문 2) 다음 지속가능성 공시정보 중에서 귀하가 투자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정보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 선택
기업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활동내용	14.96%	7.87%	7.87%	30.70%
기업의 지속가능 이슈 관련 위험 및 기회,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	54.33%	24.41%	10.24%	88.98%
기업의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전략과 계획	7.87%	22.83%	17.32%	48.02%
기업의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목표의 이행상황 및 성과	5.51%	12.60%	18.90%	37.01%
기업이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위험 관리 능력	8.66%	24.41%	24.41%	57.48%
기업이 지속가능 이슈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6.30%	5.51%	17.32%	29.13%

설문결과

질문 3) 기존의 지속가능보고서가 투자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 다음 질적특성 중 가장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3가지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선택
목적적합성	25.98%	22.83%	10.24%	59.05%
비교가능성	24.41%	24.41%	14.96%	63.78%
검증가능성	2.36%	11.02%	11.02%	24.40%
표현충실성	17.32%	14.17%	17.32%	48.81%
이해가능성	3.15%	14.17%	11.02%	28.34%
적시성	23.62%	11.02%	29.13%	63.77%

설문결과

질문 4) ESG 공시(IFRS S1 S2) 의무화와 관련하여 다음 중 귀하가 가장 우려하는 3가지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 3)

항목	1순위	2순위	3순위	총선택
목적적합성	25.98%	22.83%	10.24%	59.05%
비교가능성	24.41%	24.41%	14.96%	63.78%
검증가능성	2.36%	11.02%	11.02%	24.40%
표현충실성	17.32%	14.17%	17.32%	48.81%
이해가능성	3.15%	14.17%	11.02%	28.34%
적시성	23.62%	11.02%	29.13%	63.77%

질문 5) 귀하는 ESG 공시(IFRS S1 S2) 의무화가 현재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교하여 질적특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질적특성	매우 증가	다소 증가	변화 없음	다소 감소	매우 감소
목적적합성(가치관련성)	3.94%	52.76%	31.50%	11.81%	0.00%
표현충실성	5.51%	57.48%	24.41%	12.60%	0.00%
이해가능성	5.51%	56.69%	16.54%	21.26%	0.00%
비교가능성	3.94%	36.22%	37.80%	22.05%	0.00%
적시성	5.51%	40.16%	0.79%	19.69%	33.86%
검증가능성	6.30%	44.88%	1.57%	25.20%	22.05%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 기본 방향 >

- ① **(국제적 정합성)** EU 등 해외 주요국 ESG 공시제도, ISSB의 글로벌 기준과 일관성 있게 제도를 설계
- ② **(기업의 수용가능성)**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 및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한 이행계획 수립
- ③ **(정보 유용성)** 정보 이용자인 투자자에게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 높은 양질의 ESG 정보를 제공

설문결과 및 의견

- 응답자의 약 83.5%가 지속가능성 정보가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
- ESG 공시(IFRS S1·S2) 의무화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공시와 비교할 때 목적적합성(가치관련성), 표현충실성,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등 **정보의 질적 특성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적시성, 검증가능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도 다수 존재- 탄소배출량 공시, 인증 의무 부재 영향으로 추정됨

1. 공시시기 및 대상(案)

- EU 역외기업 공시시기('29년),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공시** 시기를 **결정**하고 공시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58개사, 약 6.9%)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
 - * [예] '29년^{FY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
 -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27.6월^{FY26}부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9년^{FY28}부터 **EU 역외 공시의무**가 적용되어 공시경험 축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 다만,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면제(공시대상 확대시에도 동일 적용)
 - * [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

설문질의

- 1-1. 현재 공시 시기 및 대상(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2. ESG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3.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 ESG 공시 의무화 대상(30조 이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4 다음 중 의무 공시 대상 판단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고려사항 3가지의 순위는 무엇입니까?(순위3)
- 1-5.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의무공시 시작 1년 이후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기준 10조원 기준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1-6. 공시 첫해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의 연결대상 제외를 허용하는 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1. 현재 공시 시기 및 대상(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매우 느리다	17.32%
다소 느리다	27.56%
적당하다	37.01%
다소 이르다	14.96%
너무 이르다	3.15%

응답	학계	회계법인	기타
매우 느리다	13.79%	29.17%	18.75%
다소 느리다	25.29%	29.17%	37.50%
적당하다	42.53%	25.00%	25.00%
다소 이르다	16.09%	12.50%	12.50%
너무 이르다	2.30%	4.17%	6.25%

1-2. ESG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적정	65.35%
1년유예필요	16.54%
2년유예필요	5.51%
3년유예필요	7.09%
5년이상유예필요	0.79%
총계	4.72%

1-4 다음 중 의무 공시 대상 판단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고려사항 3가지의 순위는 무엇입니까?(순위3)

판단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총 선택
연결자산	48.82%	18.11%	14.96%	81.89%
개별자산	6.30%	8.66%	8.66%	23.62%
연결매출액	14.96%	33.86%	25.20%	74.02%
개별매출액	1.57%	5.51%	3.94%	11.02%
시가총액	15.75%	22.05%	29.92%	67.72%
시장유형(코스피·코스닥)	9.45%	8.66%	11.81%	29.92%

1-5. 단계적 의무화를 위해 의무공시 시작 1년 이후 공시 대상을 연결자산기준 10조원 기준으로 확대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의무공시 대상축소 필요(20조원이상)	9.45%
적정	48.03%
의무공시 대상확대 필요(2조원이상)	42.52%

1-6. 공시 첫해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의 연결대상 제외를 허용하는 안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연결대상제외축소필요(5% 미만)	27.6%
적정	59.1%
연결대상제외확대필요(15% 미만)	13.4%

응답	학계	회계법인	기타
연결대상 제외 축소필요(5% 미만)	20.69%	29.17%	62.50%
적정	63.22%	58.33%	37.50%
연결대상 제외 확대필요(15% 미만)	16.09%	12.50%	0.00%

1. 공시시기 및 대상(案)

- EU 역외기업 공시시기('29년),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초공시** 시기를 **결정**하고 공시역량이 충분한 **대형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58개사, 약 6.9%)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공시 시행
 - * [예] '29년^{FY28}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하고 추후 국제동향,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논의
 - 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에서 '27.6월^{FY26}부터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9년^{FY28}부터 **EU 역외 공시의무**가 적용되어 공시경험 축적도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 다만, 공시 첫 해에 한하여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국내외 종속회사** 공시의무 면제(공시대상 확대시에도 동일 적용)
 - * [예] 자산·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

설문결과 및 의견

- 응답자의 37.0%는 현행 공시 시기 및 대상(안)을 적정하다고 평가하였으나, **'도입 시기가 (매우 혹은 다소)느리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이는 ESG 공시 제도의 도입 예정 시기가 적정한 시기보다 이미 지연되었거나, **단계적 도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됨.

의무공시 대상 고려 시 연결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연결 매출액, 시가 총액 등 다중 기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음.

2. 스코프3 유예(案)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 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 재검토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의 탄소배출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해외사례 참고

※ (日·호주) 스코프3 1년 유예, (캐나다) 3년 유예,
(홍콩·싱가포르) 시총상위기업(홍콩 200개사, 싱가포르 30개사)만 의무공시(1년유예),
(영국案) 완화된 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29년 시행 검토

설문질의

2-1. 스코프 3 정보의 의사결정 유용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2-2 (우리나라와 각 국의 현행 스코프 3 유예안을 고려 했을 때) 다음 중 스코프 3를 의무공시에 포함하는 시기(ESG 정보 의무 공시 시기 대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2-1. 스코프 3 정보의 의사결정 유용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매우 유용하다	18.9%
다소 유용하다	34.7%
보통이다	29.9%
다소 유용하지않다	12.6%
전혀 유용하지않다	3.9%

응답	학계	회계법인	기타
매우유용하다	16.1%	20.8%	31.3%
다소유용하다	35.6%	29.2%	37.5%
보통이다	28.7%	37.5%	25.0%
다소유용하지않다	14.9%	12.5%	0.0%
전혀유용하지않다	4.6%	0.0%	6.3%

2-2 (우리나라와 각 국의 현행 스코프 3 유예안을 고려 했을 때) 다음 중 스코프 3를 의무공시에 포함하는 시기(ESG 정보 의무 공시 시기 대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주요 국가별 스코프3 공시 유예
 (日·호주) 스코프3 1년 유예, (캐나다) 3년 유예
 (홍콩·싱가포르) 시총상위기업(홍콩 200개사, 싱가포르 30개사)만 의무공시(1년유예)
 (영국案) 완화된 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29년 시행 검토

응답	비율
1년 유예	31.5%
2년 유예	18.9%
3년 유예(현행)	36.2%
4년 유예	2.36%
5년이상 유예	11.2%

응답	학계	회계법인	기타
1년 유예	26.44%	37.50%	50.00%
2년 유예	17.24%	25.00%	18.75%
3년 유예(현행)	39.08%	29.17%	31.25%
4년 유예	3.45%	0.00%	0.00%
5년 이상 유예	13.79%	8.33%	0.00%

2. 스코프3 유예(案)

* (스코프1) 직접 배출, (스코프2)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 (스코프3)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원칙적으로 '31년부터 공시 시작(공시대상별로 3년유예)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로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 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시 면제범위 재검토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개 업종의 탄소배출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등 해외사례 참고

※ (日·호주) 스코프3 1년 유예, (캐나다) 3년 유예,
(홍콩·싱가포르) 시총상위기업(홍콩 200개사, 싱가포르 30개사)만 의무공시(1년유예),
(영국案) 완화된 방식(Comply or Explain)으로 '29년 시행 검토

설문결과 및 의견

- 스코프 3 의무화의 경우 현행 로드맵 기준인 3년 유예가 가장 높은 비율(36.22%)로 나타남. 국외에서는 스코프 3에 대해서 Safe Harbor(면책 조항)가 존재하기에 국내에서도 스코프 3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처럼 3년 정도 정착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존재.

3. 공시기준

-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IFRS 재단(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
 -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 공시
 -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 완화***
 - * ①톤 당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 ②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 물소비량, [자동차산업] 차량별 평균연비)의 선택공시 허용
 - **정책공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추후 사회(S, Social)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
 -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

[참고 : 공시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거버넌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
2. 전략 :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에 미치는 영향
3. 위험관리 : 기업이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4.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톤 당 내부탄소가격(선택),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예: 반도체·물사용량, 자동차·연비), 기후 관련 목표

설문질의

- 3-1. KSSB 확정안의 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3-2. KSSB 확정안의 국제적 정합성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3-3. KSSB 확정안의 국내 기업들의 수용가능성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3-4. 톤 당 내부탄소가격의 선택공시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3-5. 산업별 지표의 선택공시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3-6. 귀하는 정책공시*의 제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정책공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추후 사회(S, Social)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할 예정이다.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

3-1. KSSB 확정안의 국내 산업 특수성 반영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3-2. KSSB 확정안의 국제적 정합성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3-3. KSSB 확정안의 국내 기업들의 수용가능성 수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항	매우 낮다	다소 낮다	보통이다	다소 높다	매우 높다
3-1. KSSB 확정안의 국내산업특수성 반영수준	1.57%	15.75%	47.24%	25.98%	9.45%
3-2. KSSB 확정안의 국제적 정합성수준	1.57%	25.98%	36.22%	27.56%	8.66%
3-3. KSSB 확정안의 국내기업 수용가능성수준	0.79%	16.54%	47.24%	27.56%	7.87%

3-4. 톤 당 내부탄소가격의 선택공시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3-5. 산업별 지표의 선택공시 허용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3-6. 귀하는 정책공시*의 제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정책공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추후 사회(S, Social)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할 예정이다.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 경영 등)

문항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3-4. 내부탄소가격 선택공시허용	4.72%	28.35%	29.92%	29.13%	7.87%
3-5. 산업별지표 선택공시허용	4.72%	29.92%	29.92%	27.56%	7.87%
3-6. 정책공시 제외허용	2.36%	18.11%	33.86%	32.28%	13.39%

3. 공시기준

-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IFRS 재단(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
 -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다른 주제(기후 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 공시
 -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 완화***
 - * ①톤 당 내부탄소가격(기업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가치), ②산업별 지표(예: [반도체산업] 물소비량, [자동차산업] 차량별 평균연비)의 선택공시 허용
 - **정책공시***는 기업의 수용가능성과 글로벌 정합성을 감안하여 **추후** 사회(S, Social) 관련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
 - * 부처 등에서 기업이 공시하기를 권고하는 정책 목적의 정보(예: 가족친화경영, 인권경영 등)

[참고 : 공시기준 주요 내용 요약]

1. **거버넌스** :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모니터링, 관리, 감독하기 위한 체계
2. **전략** : 기후로 인한 위험 및 기회가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 재무에 미치는 영향
3. **위험관리** : 기업이 위험을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 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4. **지표 및 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 환산톤), 위험 및 기회와 관련된 자산·사업활동의 금액비율, 톤 당 내부탄소가격(선택), 산업별 특성에 따른 지표(예: 반도체·물사용량, 자동차·연비), 기후 관련 목표

설문결과 및 의견

- **IFRS 재단 기준은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다만, 확정안의 국내산업 특수성 반영 수준, 국제적 정합성 수준, 국내기업의 수용가능 수준은 보통이거나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 **국내산업 특수성 및 수용가능성을 위해 기준재정의 적극적 지원 필요.**
- 탄소가격 선택공시의 허용, 정책공시 제외 허용은 보통이거나 다소 바람직. 산업별지표 선택공시 허용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보통인 의견과 동률. 이는 **산업별지표의 공시를 강화(의무화 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4. 공시채널 및 면책(案)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 공시로 바로 도입하기 보다 **일정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

* 의견수렴(~3.31일)을 통해 법정공시 전환시기 확정 예정

○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 추진

-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에 오류 발견시에도 면책 허용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제도 운영

설문질의

4-1. 의무공시 초기에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4-2. 의무공시 초기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하는 시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4-3.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면책)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에 오류 발견시에도 면책을 허용한다.

4-4. 제도 도입 첫 해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제도 운영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4-1. 의무공시 초기에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4-3.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면책)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에 오류 발견시에도 면책을 허용한다.

4-4. 제도 도입 첫 해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제도 운영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4-1. 거래소 공시에서 법정공시 전환 안	2.36%	19.69%	22.05%	41.73%	14.17%
4-3. 면책 부여 안	0.79%	11.02%	24.41%	41.73%	22.05%
4-4. 도입초기 계도·컨설팅 중심 운영	0.79%	7.87%	16.54%	41.73%	33.07%

4-2. 의무공시 초기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하는 시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항	의무공시 1년후	의무공시 2년후	의무공시 3년 이후
4-2. 법정공시 전환시점	44.9%	37.01%	18.9%

4. 공시채널 및 면책(案)

□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 공시로 바로 도입하기보다 **일정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검토

* 의견수렴(~3.31일)을 통해 법정공시 전환시기 확정 예정

○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 추진

-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에 오류 발견시에도 면책 허용

□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제도·컨설팅 중심**으로 제도 운영

설문결과 및 의견

- 공시 채널과 관련하여, 초기 거래소 공시 도입, 면책 부여, 제도 및 컨설팅 중심 제도 운영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거래소 공시를 장기간 유지하기보다는 신속히 법정공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 **응답자의 81.1%(103명)가 1~2년 내 법정공시 전환**을 선호한 반면, 3년 이상 유지 의견은 18.9%(24명)에 그쳤음.

5. 공시시점 및 인증(案)

- (공시시점) 주요국은 사업보고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함을 감안하여 사업보고서 공시시점과 동일한 시점(3월말)에 공시 필요
 - 다만, 매년 5월경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인증중*으로 3월말 공시시 인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중순) 공시 허용 검토
 - * 배출량 인증 시점으로 인해 현재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6~7월경 집중공시
- (제3자 인증)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나,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 ※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상당수는 자율적인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음(회계법인, 경영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업무수행)
 - 추후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 자격) 마련 검토
 - * 일본은 회계법인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허용할 예정 → 해당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규율체계 마련 검토

설문질의

- 5-1. ESG 공시를 사업보고서 공시시점과 동일한 시점(3월말)에 공시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5-2. ESG 공시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서 공시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5-3. ESG 의무공시 도입 초기에 제3자 인증을 자율화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5-4. ESG 공시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시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5-5. ESG 공시의 제3자 인증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3개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5-1. ESG 공시를 사업보고서 공시시점과 동일한 시점(3월말)에 공시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5-2. ESG 공시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에서 공시하도록 허용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5-3. ESG 의무공시 도입 초기에 제3자 인증을 자율화하는 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5-1. 재무보고와 공시시점 일치	9.45%	14.17%	19.69%	31.50%	25.20%
5-2. 온실가스 배출량정보 반기 결산시점 공시	6.30%	10.24%	25.20%	43.31%	14.96%
5-3. 도입초기 3자 인증 자율화	17.32%	21.26%	22.05%	24.41%	14.96%

5-4. ESG 공시의 제3자 인증을 의무화하는 시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응답	비율
1년유예	52.76%
2년유예	29.13%
3년이상유예	18.11%

5-5. ESG 공시의 제3자 인증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기관 3개의 순위를 골라 주십시오.(순위3)

기관	1순위	2순위	3순위	총 선택
재무제표감사인	39.37%	16.54%	29.13%	85.04%
회계법인(이탈리아)	25.20%	54.33%	10.24%	89.77%
국가공인기관(프랑스)	29.13%	18.11%	44.88%	92.12%
제한없음(미국)	6.30%	8.66%	8.66%	23.62%

5. 공시시점 및 인증(案)

- (공시시점) 주요국은 사업보고서와 동시에 공시하도록 함을 감안하여 사업보고서 공시시점과 동일한 시점(3월말)에 공시 필요
 - 다만, 매년 5월경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배출량을 인증중*으로 3월말 공시시 인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중순) 공시 허용 검토
 - * 배출량 인증 시점으로 인해 현재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6~7월경 집중공시
- (제3자 인증) 공시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자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나,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되,
 - ※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기업의 상당수는 자율적인 제3자 인증을 받고 있음(회계법인, 경영컨설팅 기관 등 다양한 기관이 업무수행)
 - 추후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 자격) 마련 검토
 - * 일본은 회계법인 외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대해서도 인증업무를 허용할 예정 → 해당 자격요건 등을 감안하여 규율체계 마련 검토

설문결과 및 의견

- 제3자 인증과 관련하여, 초기 인증 자율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장기적으로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81.9%(104명)가 1~2년 내 인증 의무화 도입을 선호.**

6. 이행 지원(案)

- (자율공시 장려) 스코프3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검토
 - * 공시우수법인 선정시 상장수수료 등 면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등 혜택(거래소)
- (공시이행 지원) 세부 가이드라인(교육자료) 제공, 실제 기업 대상 공시기준 시범적용(Pilot Test) 등 맞춤형 공시 이행지원 추진
-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스코프3 상세 안내서 제공 및 배출계수 고도화 등 온실가스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
 - * [예] 전과정목록(Life Cycle Inventory) DB, 산업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등
- (전환금융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에게 필요한 자금공급 확대 등 전환금융체계 마련

설문질의 및 결과

6-1. 귀하는 ESG 공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위의 안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

* 주관식응답을 의미 유사성 기준으로 재분류 하였으며, 동일 또는 유사 의미의 응답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였다

응답	빈도	비율
공시 실무 가이드 및 사례 제공 필요	19	21%
규제 및 보상	17	19%
교육·전문인력·인프라지원 필요	15	17%
정부지원 및 비용지원 필요	14	16%
제3자 인증 및 검증체계 보완 필요	7	8%
데이터·시스템 구축 필요	6	7%
인식 제고	5	6%
산업별·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필요	3	3%
공시기준 및 범위 명확화 필요	2	2%
국제 정합성 및 비교가능성 확보 필요	1	1%
반대·유보 의견	1	1%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견수렴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서는 한국회계학회장의 위임에 따라 지속가능성 위원회와 연구·교육위원회가 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와 의견은 설문에 참여한 회원 및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개인적·전문적 견해이며, 한국회계학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의견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위원회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위원장: 전규안(승실대)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장: 정준희(대구대)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회: 기도훈(한밭대), 박성종(한경국립대),
손혁(계명대), 전홍민(성신여대), 정광화(강원대), 최종원(연세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9 (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 911호
한국회계학회 학회장 김기영
학회사무실 연락처: (02) 363-1648
학회 E-mail: kaa363@naver.com

연구책임자 정준희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장 연락처: 010-7583-3393
E-mail: janny81@daegu.com

-한국회계학회 지속가능성 연구·교육위원회-



한국회계학회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 ESG 공시 로드맵 초안 관련 의견수렴 안내사항 >

- 의견수렴기간 : 2026.2.25일(수) ~ 2026.3.31일(화)
 -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fmfsc@korea.kr - 팩스 : 02-2100-2678

- 첫째, 본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투자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 공시 의무화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지지함. 특히 IFRS S1·S2 기반 공시체계는 정보의 목적적합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 자율공시 체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ESG 공시 제도의 도입 시기와 관련하여 시기의 지연 혹은 대상의 축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글로벌 규제 환경과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고려할 때, 현행 도입 일정은 다소 보수적인 접근으로 평가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적 도입에서 대상기업 기준(규모, 상장시장 등)을 완화하여 대상 기업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을 기대함.
- 셋째, 공시 채널과 관련하여 초기 거래소 공시 방식은 제도 연착륙을 위한 과도기적 장치로서 의미가 있으나,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재무정보 수준의 위상으로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라는 글로벌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거래소 공시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조속히 법정 공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스코프3 공시와 관련하여 단계적 도입 및 유예 필요성에는 공감함. 스코프 3와 관련해서는 당장 의무화하기보다 현행기준처럼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작성자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음.
- 다섯째, 제3자 인증과 관련하여 초기 인증 의무의 자율화는 제도 도입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수용 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의무화가 필수적임. 특히 인증 의무화 시기는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조기 도입을 통해 공시정보의 검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섯째,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공시 역량과 인프라 수준을 고려하여 계도 및 컨설팅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 다만 이러한 유연성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규율 중심의 공시 체계로 전환되어야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는 ESG 공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판단됨.

Thank you

HD현대의 지속가능경영 Governance 구축 사례

2026년 6월 심정은 상무

Part 01

Global Sustainability 공시규정에 내재된
기업경영 변화에 대한 요구

제반 공시규정이 요구하는 보고·공시·이행 주체

최상위 책임주체로 「최종 지주(모)회사」를 지목 → 그룹 연결(consolidated) 관점의 거버넌스가 전제됨



IFRS S1·S2

“

“... shall be for the same reporting entity as the related financial statements.”

— IFRS S1 para.20 · KSSB 제1호 문단20

보고실체(reporting entity)는 재무제표와 동일(문단20). 위험·기회는 자체사업과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으로 확장(문단 B38–B40).



ESRS (EU CSRD)

“

“Parent undertakings of a large group shall include in the consolidated management report ...”

— Dir. 2013/34/EU Art. 29a(1) (개정 CSRD 2022/2464)

대규모 그룹의 지배기업이 연결관리보고서에 그룹 전체의 영향·재무영향을 ESRS 기준으로 공시

(개별 Art.19a / 연결 Art.29a)



CSDDD (EU 공급망 실사지침)

“

“... the ultimate parent company of a group that reached those thresholds ...”

— Dir. (EU) 2024/1760 Art. 2(1)(b)·3(1)

의무주체 = 최종모회사(ultimate parent)·연결기준 적용. 그룹 전체 실사 의무 부과, 자회사 실사는 모회사가 대신 이행 가능(Art.6).

지속가능성 공시의 기본 구조

KSSB 제1호(일반사항)의 4대 핵심요소 - 기업의 의사결정과정, 판단근거, 관리체계를 모두 공시하라는 것

거버넌스

Governance

지속가능성 위험·기회를 모니터링·관리·감독하는 거버넌스 프로세스·통제·절차

전략

Strategy

위험·기회 관리 접근법 — 사업모형·가치사슬·재무에 미치는 영향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기회를 식별·평가·우선순위화·모니터링하는 프로세스

지표 및 목표

Metrics & targets

관련 성과(설정 목표·법규상 목표 대비 진척도 포함) → 기후 7대 지표

「지표 및 목표」의 구체화 — 기후 산업공통(cross-industry) 7대 지표 (KSSB 제2호 / IFRS S2 para.29)

- 1 온실가스 배출량 (S1-2-3)
- 2 전환위험
- 3 물리적 위험
- 4 기회
- 5 자본 배치
- 6 내부 탄소가격
- 7 경영진 보상

공시범위와 주제의 선정은 기업의 판단에 맡기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스투어드십코드, Shame & Blame 메커니즘 반응

중대성 평가 (Materiality)

기업 전망(prospects)에 영향을 미칠 위험·기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황·가정 변화를 반영해 매 보고기일 재평가. ESRs는 영향 중대성까지 포함한 「이중 중대성」 적용.

위험기반접근 (Risk-Based Approach)

부정적 영향의 발생가능성·심각성이 높은 영역을 우선 점검하는 <범위 설정→심화평가→개선조치> 모델(CSDDD 실사원칙, Recital 31)을 도입.

사업의 정의, 공시 범위, 공시해야할 위험과 기회는 공시주체가 직접 파악하고 선택

가치사슬(Value Chain) 사업의 범위(Scope) 위험과 기회(IRO)

표준은 보고경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합리적·뒷받침가능한 정보(reasonable & supportable info)」 범위에서 공시주체가 직접 식별·선택하도록 위임

기후공시 이후, 공시 주제의 확장

기후를 출발점으로 자연(생물다양성)·인적자본 등으로 주제를 단계적으로 확장 중



기후 (출발점) *Climate*

온실가스·전환위험·물리적 위험. 첫 의무공시 주제

기준 IFRS S2 · KSSB 제2호 · ESRS E1 · TCFD



생물다양성·생태계 *Nature*

ISSB가 BEES(생물다양성·생태계·생태계서비스) 연구 프로젝트 진행 — TNFD를 기반으로 검토

기준 ISSB BEES(연구) · ESRS E4 · TNFD



인적자본 *Human Capital*

ISSB가 인적자본 연구 프로젝트 진행 — 다양성·보상·교육·보건안전 등 인력 관련 정보

기준 ISSB Human Capital(연구) · ESRS S1



기타 환경·사회·지배구조

오염·물·자원순환, 가치사슬 근로자·지역사회·소비자, 기업윤리 등으로 확장

기준 ESRS E2-E3-E5 / S2-S3-S4 / G1

국제 규범이 요구하는 「책임있는 기업경영」

OECD 가이드라인·RBC 실시지침과 EU CSDDD는 동일한 실사 6단계로 「책임있는 기업경영(RBC)」을 경영·관리체계에 내재화하고 공시할 것을 요구

OECD-CSDDD의 인권 실사 6단계

- 1 내재화 (Embed)**
실사를 정책·위험관리 시스템에 통합 — 위험기반(risk-based) 실사
- 2 식별·평가 (Identify & Assess)**
자체사업·자회사·활동사슬의 부정적 영향 식별 및 우선순위 평가 (제8·9조)
- 3 예방·종료 (Prevent & Cease)**
부정적 영향의 예방·중단·완화 — 적절한 조치·시정계획(CAP/PAP) (제10·11조)
- 4 모니터링·검증 (Monitor)**
조치의 적절성·효과성 검증, 정량·정성 지표 기반 모니터링 (제15조)
- 5 소통·공시 (Communicate)**
영향과 대응을 외부에 공개·소통, 연 1회 공시 (제16조)
- 6 구제·고충처리 (Remediate)**
구제 제공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운영 (제12·14조)

+ 이해관계자 참여 (제13조) — 전 단계에 걸친 유의미한 참여를 명시

핵심 메시지

- 다국적·대기업의 「책임있는 기업경영(RBC)」 요구
- 환경·인권을 위험관리·경영·투자 의사결정에 내재화
- 이행 여부를 매년 공개 — 자율에서 의무·검증의 영역으로

감사인과 감사(Assurance)의 진화 — Accountant → Auditor

- 회계 전문직(Accountant)을 넘어서는 사회 제반 가치관에 대한 판단의 역할로 확장
- 국제사회·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치관·철학을 이해하고, 경영 내재화 여부를 평가
- 정확한 공시·소통 여부까지 판단 — 수치 검증을 넘어 방법론·정보의 신뢰성 평가
- 절차적 검증에 그치면 「그린워싱」 위험

Business & Human Rights Due-Diligence(인권실사)의 확산

ESG는 자율규범에서 출발하여 공급망전반에 대한 실사규정으로 법제화. 최근 EU는 이를 시장 공정성으로 확대

국제 규범 (Soft Law) — 실사의 토대

- **UNGPs (2011)**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보호·존중·구제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 인권 챕터, 2023 기후·생물다양성 반영
- **OECD RBC 실사지침 (2018)** 책임있는 기업경영 — 6단계 실사
-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아동노동 금지 등

실사 의무 법령 (Hard Law) — 제품·원료·포괄 규제

- **분쟁광물** EU 분쟁광물 규정 (EU) 2017/821 — 주석·탄탈럼·텅스텐·금
- **산림** EU 산림벌채 규정 EUDR (EU) 2023/1115 — 목재·고무·대두 등
- **배터리** EU 배터리 규정 (EU) 2023/1542 — 코발트·리튬·니켈, 배터리어권
- **강제노동**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정 (EU) 2024/3015
- **국가 실사법**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 **포괄 실사**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CSDDD (EU) 2024/1760

Sustainability가 비관세장벽과 비가격요소의 평가기준으로 확대

- **Clean Industrial Deal (2025.2)**
공공조달지침 개정으로 지속가능성·복원력·「Made in EU」 비가격 기준을 주류화 (시행 ~Q4 2026)
- **EU Industrial Maritime & Ports Strategy (2026.3.4)**
공공조달 비가격 기준·역내 건조·공정경쟁(fair competition) 유도
-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2026.3)**
공공·민간 조달에 저탄소·「Made in EU」 요건 도입, 탄소집약도 라벨
- **Net-Zero Industry Act (NZIA, 기시행)**
청정기술·재생에너지 조달에 비가격 기준 의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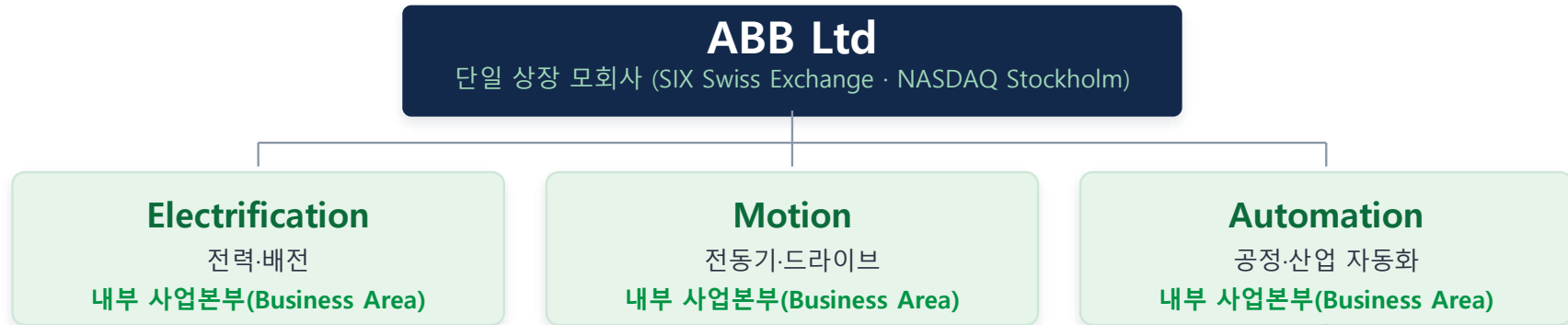
Part 02

Global 공시기준을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적용시 고려사항

유럽 다국적 기업의 지분구조 ① ABB Ltd

Investor AB (Wallenberg) ≈ 14.3%
 창업·산업가문 지주 · 최대주주 · 로봇 분사 지지

Free float ≈ 86%
 기관투자자 중심 · 1주 1의결권 · 차등의결권 없음



3개 사업본부는 법인격 있는 단일 자회사가 아니라, **약 20개 디비전·다수 완전자회사를 묶는 내부 관리단위** 시너지 낮은 사업부분의 분사(Robotics) — 법인격·의사결정이 단일 상장 모회사로 수렴

Robotics
 2026년 별도 상장 분사 (그룹의 약 7%)

연결대상 자회사 현황

2023.12.31 · 휴면법인 제외
 (SEC 20-F Exhibit 8.1 집계)

252개사
 총 연결자회사

185개사
 완전자회사(100%)

197개사
 실질적 완전자회사(≥99.8%)

55개사
 부분보유·합작(<99.8%)

유럽 다국적 기업의 지분구조 ② Siemens, Volkswagen

복잡도: ABB(전형·단일 모회사) < Siemens(단일 모회사 + 부분상장·분리) < Volkswagen(다단계 상장)

Siemens AG — 단일 상장 모회사 + 부분상장·분리

Free float ≈ 94% · Siemens 가문 ≈ 6% · 1주 1의결권

Siemens AG

Frankfurt · Xetra 상장

Digital Ind.
디지털산업

Smart Infra.
스마트인프라

Mobility
모빌리티

↑ 100% 보유 내부 사업부문

Healthineers ≈ 67%
상장 · 연결 제외(deconsolidation) 추진

Energy ≈ 10%
지분법 중단 · 금융자산 분류

단일 상장 모회사로 수렴 — **일부만 상장분할(Healthineers)·지분 축소분리(Energy)**. 핵심 3개 부문은 내부 보유

Volkswagen AG — 다단계 상장 (가장 복잡)

의결권: Porsche SE 53.3% · Lower Saxony 20.0%(거부권) · Qatar 17.0%

Volkswagen AG

Frankfurt · 보통주(의결권)/우선주(무의결권)

Porsche AG
별도 상장 (IPO 2022)

TRATON SE
상용차 · 별도 상장

↑ 상장 자회사 계층 (multi-listed)

브랜드그룹
Core-Progress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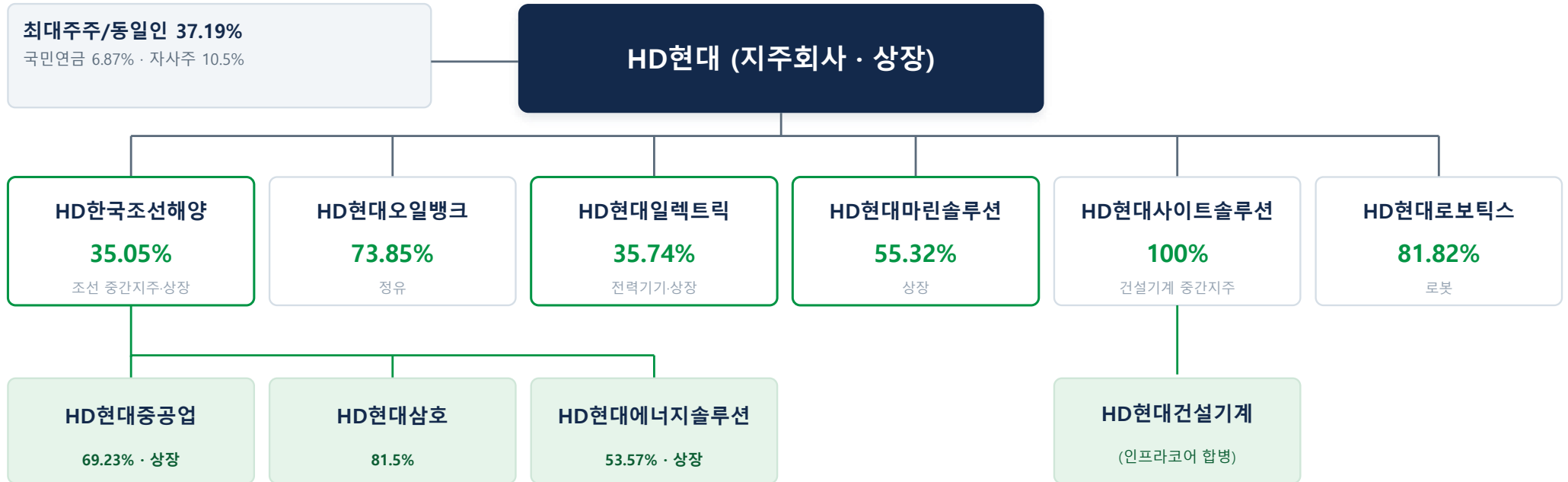
PowerCo
배터리

CARIAD
소프트웨어

Porsche SE→VW AG→Porsche AG-TRATON 다단계 상장 — **한국형 구조와 가장 유사** (단 「폭스바겐법」·노사 공동결정으로 차별화)

HD현대 그룹의 지분구조

다양한 사업범위와 중복상장은 한국 대기업의 주요 특징



← HD한국조선해양 산하 (조선 손자회사)

유럽 단일 모회사 구조와의 차이 · 시사점

사업 다각화 한 그룹 내 사업이 매우 다양 (공정 위 지정 약 32개 계열사) — 조선·해양 9 · 정유·에너지 4 · 건설기계 2 · 전력 1 · 로봇 1 등

다단계 중복상장 지주(HD현대)·중간지주(HD한국조선해양)·사업회사(HD현대중공업)가 모두 상장 — 자·손자회사까지 상장된 이례적 구조

낮은 지분율 최종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참여 비율이 낮음(조선 35%) → 일원적 지배·실사에 한계

국내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지배구조와의 차이

최종모회사의 관리책임을 전제하는 국제규범과는 달리, 한국의 법제는 모회사의 계열사/협력사의 경영간섭을 제한



상법 — 자회사의 독립 법인격

- 「회사」는 법인(상법 §169) —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독립 법인격
-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충실의무, 상법 §382의3)
- 지주회사는 직접 지시가 아닌 주주권(의결권·이사 선임)으로만 영향



공정거래법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 자회사주식보유기준: 상장 30%·비상장 50% 이상 보유 의무(§18②2)
-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상장 30%·비상장 50%(§18③1)
-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 금지(§18④)·증손회사 금지(§18⑤)



하도급법 §18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18①)
-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는 부당 경영간섭으로 봄(§18②3)
- → 협력사 ESG·인권 실사 데이터 수집이 법적으로 민감



이사회의 감독기능

-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 비중 韓 37% vs 美 82%
- 이사회 의장-CEO 분리 11.4% 수준
- 미·유럽 대비 이사회의 독립적 감독·견제 기능이 한정적

Part 03

HD현대의 Roadmap

HD현대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과 EU 정책환경

2028 (FY27) 국내 KSSB

연결자산 30조 ↑ 상장사부터
기후공시부터 순차 의무화

- 2026년 현재 95개 연결자회사의 통합 공시
- 30조이상의 상장회사 2개 우선 공시

2029 (FY28) EU CSRD

지주사(HD현대) 연결 공시
ESG 전반 공시 요구

2030 (FY29) EU CSDDD

최종모회사 보고 의무
자회사·공급망 실사 이행·결과

- EU고객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서 실사 참여

기존 기후전략(탄소중립선언) 관행의 한계점

지난 몇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탄소중립선언은 공시 이후의 소통전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



과거 국내 대기업의 탄소중립전략의 한계

(제반 컨설팅 관행의 공통 문제점)

계열회사의 사업 및 생산환경 미반영

해당 기업의 실제 생산·공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표준 목표

내부 관리체계와 진척관리 부재

목표 대비 진척도를 관리·점검하는 실질 방안이 제공되지 않음

공시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전략 미흡

가장 중요하게는, 공시 이후의 전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음



공시 이후(Post-disclosure)를 고려한 전략

공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 —
콘텐츠 자체의 적합성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반응과 차년도 공시를 함께 설계해야 함

전략적으로 정의해야 할 질문

- 1 어디까지 공시 해야하는가? (범위·수준)
- 2 어느 수준까지 공시할 것인가? (정밀도)
- 3 어떤 형태로 공시할 것인가? (형식)
- 4 차년도 비교공시에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기후전략의 실행 사례 — 조선계열사 통합에너지관리 플랫폼 실제 현장·사용 데이터 기반: 측정 → 관리·분석 → 성과평가 연계

1 현장 데이터 실측·집계

계측기 등 데이터 포인트를 설치해 생산현장 에너지 사용량을 실측(實測)·집계

2 관리·분석 시스템 연계

실측 데이터를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분석시스템과 연계

3 성과평가 연계

분석 결과를 임원·조직 성과평가(KPI)에 연계 실제 달성가능한 목표와 전략의 수립

인권실사(Business & Human Rights Due-Diligence)의 구축

인권경영의 도입은 위험·중대성 평가의 기본모델이자,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내재화 하기 위한 출발점

위험평가의 절차와 기본 모델을 정의

제반 이슈·위험평가와 위험기반(risk-based) 실사·중대성 판단의 토대 — 모든 ESG 위험관리가 인권실사(HRDD) 위에서 작동

규범·Agenda의 전방위 내재화

UNGPs·OECD·CSDDD 등 국제사회 요구 규범과 Agenda를 경영·관리체계 전반에 도입하는 통로

인권 “실사”의 6단계 — 경영관리체계로의 내재화(Embedding)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아래 6단계가 경영·관리 프로세스에 상시 내재화되어 순환(cycle)으로 작동해야 함



+ 이해관계자 참여(CSDDD 제13조)가 전(全) 단계를 관통 — 정책의 수립, 모니터링, 소통/공시 및 고충처리 전과정에 걸쳐 관여

인권실사(CSDDD)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CSRD) 체계로 수렴·통합될 것으로 전망

CSDDD 제16조(공시)의 연차 실사보고는 CSRD 보고기업에 면제(제16조 2항) → 실사 내용이 CSRD 지속가능성보고서(ESRS)로 흡수
위험평가절차와 접근방식이 CSRD 등 제반 ESG 공시 메커니즘과 거의 동일

HD현대 그룹 ESG 거버넌스 — 기후와 인권

그룹 차원에서 Sustainability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와 인권의 소위원회를 구성

그룹 ESG 협의체 | 의장: 그룹ESG최고책임자 · 역할: 그룹 ESG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성과관리, 산하 소위원회의 운영



그룹 탄소관리위원회

- 그룹 탄소중립 전략방향·목표 설정
- 배출권거래제 대응전략 수립
- 그룹 탄소 지표 수립·성과관리



그룹 인권경영위원회

- 그룹 인권경영 주요 정책 설정
- 그룹 인권영향평가 표준 관리
- 그룹 인권경영 실적 관리

계열사 ESG경영협의체 → 각사 탄소관리분과 · 인권경영분과 (명칭·형태 자율, 그룹 정책을 회사별 실행)

이해관계자,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 및 자문 체계 구축

그룹 연결기준 ESG 플랫폼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내재화

연결공시와 이에 대한 외부인증, 비교가능 정보의 제공, 타 실정법과 연계가 가능한 ESG데이터 기반 구축

지표·데이터 플랫폼: 국제기준 및 실정법과의 정합성

- 1 산업별로 상이한 지표의 연결기준 통합**
회사별로 상이한 지표·측정방법·산정경계를 통일하되, 그 정의를 IFRS S2 산업공통지표·SASB-GHG 프로토콜·TNFD 등 국제표준에 매핑·정합
- 2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통합**
국제사회·평가기관이 요구하는 지표(SASB·권위 있는 인권실사 지표 등)와 통합 → 글로벌 비교가능성·일관성 확보
- 3 내부회계 기준에 맞는 ESG Data 플랫폼**
인증 수준에 맞춘 ESG Data 플랫폼 — 산정 → 검증 → 연결취합 (consolidation) 프로세스 구축

관리·투자 기준의 정립

- 1 관리기준의 통일**
KPMG-KSSB 공시정책 수립 — 제1호(공시경계·중요성·책임범위)·제2호(데이터·시나리오·재무연계) 규정화
- 2 투자기준**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e) 도입·시범시행
→ 투자의사결정에 탄소비용 반영
- 3 탄소회계 범위 확대**
전과정평가(LCA)·재생에너지 조달 기회비용 평가 등으로 탄소회계 경계 확장
- 4 Taxonomy 체계 도입**
녹색 분류체계(Taxonomy) 도입 → 향후 내부 시장·투자전략과 연계

HD현대 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

1 **全社·최고경영층의 공감대 형성**

제반 ESG 공시규정이 요구하는 Agenda에 대한 전사적·최고경영층의 공감대 형성.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실제 목표설정·관리 체계 도입이 가능 — 구축의 전제조건.

2 **그룹 Governance의 구축**

- 무엇을·누구에게·어디까지·어떻게 보고하는 보고체계
- 계열사에 대한 평가·조직/임직원 성과보상 연계 체계
- 그룹 통합 관리를 규정하는 회의체·합의방식

3 **지표 정의와 관리체계의 통합**

그룹 통합 관리·평가·인증·감사에 대비한 지표의 정의와 연결기준 + 연결공시를 대비하기 위한 Data Matrix 구축.

4 **이해관계자 Communication 전략**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위험관리체계·중대성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2026.6.16.

박종성(숙명여자대학교)

목 차

I.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II. 회계기본법 추진방향

1.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사항
2. 사각지대 최소화
3.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4. 운용의 중복 및 혼란의 최소화
5. 회계정책의 일관성 확보

III. 회계기본법 발의안 비교

VI. 결 론

I .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회계정보의 제공 목적

1.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 자원의 효율적 배분 촉진
-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2. 수탁책임 보고

- 자원의 부당한 사용이나 비효율적 사용 제한
- 조직의 건전한 성장

- 투명한 회계정보의 제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직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때문에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 다만, 조직유형별로 이해관계자가 다르고 그들의 정보 요구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이 조직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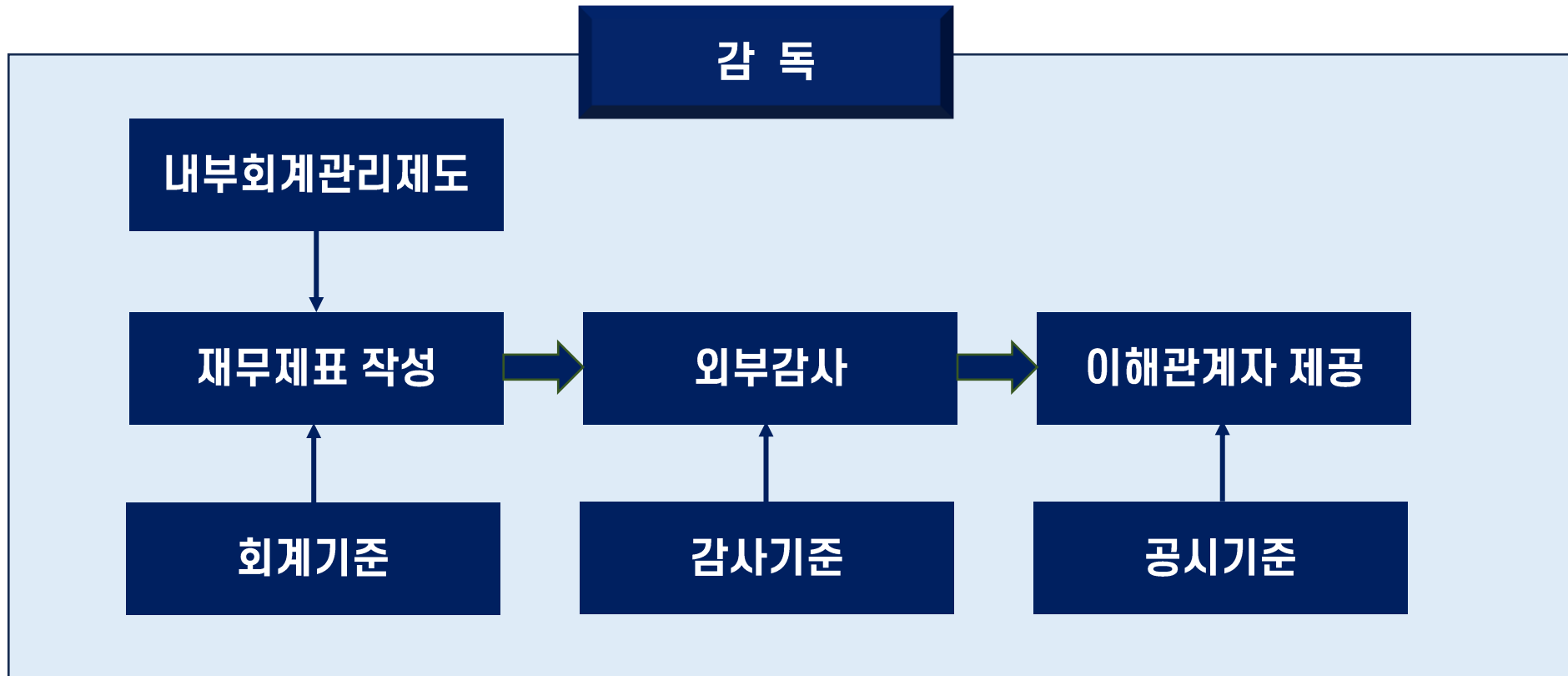
기관별 주무관청 및 적용 회계기준

구 분	주무관청	근거법령	적용 회계기준
공기업 등 공공기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공익법인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회계기준
사립학교	교육부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의료법」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회계규정

- 이처럼 주무관청과 근거법률이 다르다 보니 기관별로 회계정보의 생산 및 공시,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 →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

회계정보의 제공 절차

- 회계정보의 내용과 전달방식은 조직유형별로 상이하나, 회계정보를 생산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업무처리 절차)은 거의 유사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영리법인의 경우 주주·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고,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교적 위 네 가지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음
- 반면, 영리법인 이외 일부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 결산자료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의 사각지대에 놓임
 - 회계정보의 생산 및 감사 시 준거기준이 되는 회계기준 및 감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존재
 - 이해관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
 - 규정 간의 불일치 발생(재무제표 용어 상이 등)
- 회계와 관련된 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일관되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것도 문제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문단 3

이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2017.10.31. 「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제1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제5조 제1항 제2호로 이관

제13조(감사인의 해임) ①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며,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처리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 외부감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엉뚱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현행 제도 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구분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내부회계관리제도		개별근거법에 내부통제기준 포함(단, 중앙회에만 적용)				N/A
외부감사	대상	300억원 이상 의무감사	500억원 이상 의무감사	500억원 이상 의무감사	300억원 이상 의무감사	(1) 자산총액이 회 원조합 평균자산 규모 이상 (2)총자산대비 순 자본비율이 2% 미만인 조합 임의 감사
	주기	매년	2년	4년	2년	2년
공시 규정		개별근거법에 포함			N/A	

회계기본법의 개념과 제정 목적

회계기본법의 개념

-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회계정보의 생산 및 제공과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회계에 관한 일반법**
- 회계기본법에 회계기준, 외부감사제도, 공시제도, 회계감독 및 제재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된 원칙을 제시하고, 각 소관부처에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된 원칙에 따라 회계정책을 수립하여 운영 하되, 각 부처별 특수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회계기본법 제정의 목적

- 회계의 사각지대 최소화
-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회계제도의 수립·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혼란 최소화
- 일관성있고 통일된 회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회계투명성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II. 회계기본법 추진방향

회계기본법 제정 시 고려사항

- 회계기본법 제정 목적이 충분히 반영
- 기본법의 일반적인 기능에 부합
-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가능하도록 구체성을 가져야 함
- 회계정보의 생산 / 외부감사 / 공시 / 감독 전반에 관한 규정을 둠
- 회계기본법에서는 원칙을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 적용 배제(Opt-Out) 할 수 있도록 함

사각지대의 최소화

- 회계기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조직이나 단체에 적용**하되,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배제(Opt-Out)
- 적용 배제 여부는 각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정하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할 필요
 - 적용 배제의 허용 범위와 절차
 - 적용 배제 여부 판단 시 최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할 것을 의무화
-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장부의 작성 및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과, 그 주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총칙 뿐만 아니라 각칙에도 명확하게 규정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성(회계정보의 질적 속성)

1. 근본적 질적 속성

- ① 목적적합성
- ② 표현의 충실성

2. 보강적 질적 속성

- ① 비교가능성
- ② 검증가능성
- ③ 적시성
- ④ 이해가능성

- 명확한 회계처리기준
- 신뢰성있는 재무보고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외부감사를 통한 신뢰성 확보
- 이해관계자에 대한 적시 공시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회계기본법에서는 회계정보 생산의 준거기준인 **회계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회계처리기준 제정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구분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 제정 +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의 승인 및 수정권한	회계기본법 주무관청 일괄제정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한국 회계제도에 가까움 ▪ 각 분야 특수성 반영이 용이 ▪ 각 분야 이해관계자 참여가 용이 ▪ 제도 수용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차원의 통일된 회계체계 구축 ▪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 기준 간 정합성이 높음 ▪ 의사결정 일원화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간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조정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특수성 반영에 한계 ▪ 기본법 주무관청의 업무 부담 가중 ▪ 기존부처의 저항가능성

- 어떤 경우이든 **회계처리기준 제정 과정에 회계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화 할 필요**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외부감사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규모가 작거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경우 적용 배제
 - 외부감사 적용 배제 여부는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회계기본법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으로 하되, 주무관청이 별도로 정한 회계감사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
-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결산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회계기본법에 명시
 - 제공 방법과 시기는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이 정하도록 하되, **결산 종료 후 5개월이 넘지 않도록** 기본법에 명시

운용의 중복 및 혼란의 최소화

- 회계규범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회계기본법에서 통일하는 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이미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보다는 회계기본법에서 규정을 두어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동일한 기능을 통합하여 담당기관을 일원화
 - 영리법인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 적용되는 주기적 지정제/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주체나 감사인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제한할 필요
 - 감독기관이 감리 등을 실시할 경우 그 역할과 책임, 대상기간 및 진행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기본법에 명시

회계정책의 일관성 확보

- 회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회계기본법 주무관청을 법에 명시**하고, 그 주무관청과 개별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임
 - 회계기본법의 제정 및 개정, 운영을 위하여 회계전문성 확보 필요
 - 회계기본법이 적용될 다양한 조직이나 단체의 주무관청 및 감독부서와 협의능력을 가져야 함

- 주무관청 설계방안
 1. 기존 정부부처 활용
 2.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운 부처 신설
 3. 새로운 독립기구 신설

III. 회계기본법 발의안 비교

회계기법법 발의안 개요

구 분	여당안(더불어민주당)	야당안(국민의힘)
대표발의자	박찬대 의원 외 9인 (10인)	최은석 의원 외 10인 (11인)
발의일	2025년 12월 18일	2026년 1월 27일
총 조문 수	30개 조문 + 부칙 2조	29개 조문 + 부칙 4조
특징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조정·통합 기능을 강화하는 점진적 개혁 모델	국가회계위원회와 회계감독원을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모델

회계정책 총괄기구의 설치

구 분	여당안	야당안
기구 명칭	회계정책위원회	국가회계위원회
소속	국무총리 소속 자문·심의기구	국무총리 소속 독립 중앙행정기관
위원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 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 부위원장
위원 규모	20명 이내	9명 (소규모 전문가 중심)
당연직 위원	10개 부처 장관급	금융위 부위원장(당연직 1인)
민간·전문가 위원 구성	위원장이 위촉하는 회계전문가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한국회계학회, 공기업·공익법인·경제계(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전문가 각 1명
위원 임기	3년, 1회 연임	3년, 1회 연임
사무국 위치	금융위원회 내 설치 사무국장 = 금융위 회계정책관	위원회 내 직속 설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회계처리기준

구 분	여당안	야당안
회계기준 제정주체	조직이나 단체를 관할하는 주무관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위원회 역할	사후승인 + 수정권고	사전승인
회계기준 제정절차	주무관청 또는 위탁기관이 제정 후 위원회 승인	기준제정기구가 제정하되 국가회계위원회 사전승인
경과조치	기존 기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위원회 승인	기존 기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위원회 승인

회계감사기준

구 분	여당안	야당안
적용 회계감사기준	외감법 제16조 감사기준 적용	별도 회계감사기준 제정
위원회 승인 여부	없음	위원회의 사전승인
경과조치	없음	기존 기준 법 시행 후 1년 이내 위원회 승인

회계감독 및 위원회 권한

회계감독

구 분	여당안	야당안
감리주체	회계정책위원회	국가회계위원회
감리위탁	가능	가능
별도 감독기구	없음	회계감독원 설치

위원회 권한

구 분	여당안	야당안
주무관청에 대한 조치	시정권고	시정조치 요청
주무관청 의무	존중	따라야 함
법령개선	권고	요청

두 안의 장단점 분석

구 분	여당안	야당안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체계를 유지하므로 부처 저항이 적고 입법 과정에서 수용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10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므로,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이 용이 ▪ 별도 조직 신설 없이 금융위 내 사무국을 활용하므로, 초기 도입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높아짐 ▪ 위원회가 중요 기능을 통합 수행하므로 회계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짐 ▪ 소규모 전문가 중심 위원회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함 ▪ 회계감독원 설립으로 감독의 독립성이 강화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가 승인, 권고 등의 권한만 가지므로 위원회가 상징적 기구에 머무를 가능성 있음 ▪ 20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위원회는 의사결정이 느리고 형식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의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에 도입 과정에서의 저항이 예상됨(입법 과정에서의 수용가능성 저하) ▪ 예산과 조직 확대 필요 ▪ 기존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 있음

VI. 결론

회계기본법 제정 ≠ 규제 강화

회계기본법은 신뢰 인프라 구축법

회계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의 확대가 아니라 회계정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확대이며, 이는 시장경제와 민주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

감사합니다